

2022.06

이슈포커스 2022-02호

수산 이슈포커스

- 경영이양직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이창수 책임연구원
- CPTPP 협정에 대한 어업인 인식현황 및 시사점 | 박지훈 연구위원
-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정책 변화 | 박준모 연구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경영이양직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3
| 이창수 책임연구원
 - **CPTPP 협정에 대한 어업인 인식현황 및 시사점** 37
| 박지훈 연구위원
 - **윤석열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정책변화** 63
| 박준모 연구위원
-

경영이양직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이창수 책임연구원
(changsoo@suhyup.co.kr)

목 차

요 약	4
I. 서 론	6
II. 어촌 및 어촌계 현황	8
III.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및 사례	19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0

요 약

▶ 경영이양직불제 현황 검토 배경

- 1960년대 이후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40.5%에 달함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으며, 어촌의 중심인 어촌계에서는 왜곡된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 인력 유입이 저조함
- 이에 정부에서는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실적은 미미함
-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실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개념 및 현황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목적 : 어업경영 이양(어촌계 탈퇴) 및 고령 은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의 어촌계 유입 촉진
- 지원 대상 : 어촌계원 자격 10년 이상 유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지급조건 :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후계어업인 이양 및 어촌계 탈퇴
-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 어촌계 소득 증명 자료 및 계원명부 필요
- 지급 기준 : 어촌계 1인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적 : 21년도 6명, 총 2,280만 원 지급

▶ 제주도 사례

- 제주도의 경우 65세 이상 어촌계원이 전체의 71.3%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심각
- 특히 제주해녀 문화 계승을 위해서도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절실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녀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해녀에게는 고령해녀수당, 80세 이상에는 은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자격을 이양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킴에 따라 경영이양직불제에 참여하는 어촌계원이 없음

▶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

- 수익 증빙 여건의 한계 : 어촌계 소득을 증빙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
- * 결산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어촌계가 다수, 결산보고 양식도 상이함

- 과소한 직불금 지급 규모 :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 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어촌계 배당액이지만, 어촌계의 배당 자체가 적어 직불금의 지급액도 많지 않음
 - * 일반적으로 어촌계의 소득은 행사계약을 통해 발생하며, 익년도 예상 비용 소모액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함
 - * 제주도의 경우 해녀들에게 고령수당 및 은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동기가 부족함
- 어촌계 가입 희망자 발굴의 어려움 및 신규계원 가입의 총회 승인 불투명
 - * 어촌 현장에서는 후계어업인을 찾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음
 - * 후계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결정이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칫 가입이 불허되는 경우 발생

■ 개선 방안

- 수익 증빙 여건의 개선
 - * 어촌계 표준 회계시스템 개발 및 보급
 - * 어촌계 결산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업무 강화
- 직불금 지급금액 상향
 - * 지급 기준 변경 : 어촌계 배당금에서 어촌계원 개인소득으로 변경
 - * 단기적으로는 지급금액 상향 조정
- 직불제 대상 조건의 완화
 -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연령 확대 : 상한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조정
 - * 경영이양 대상 후계어업인 범위 확대 : 후계어업인의 대상에 직계자손이 포함
- 어촌계 가입 희망자 발굴 개선
 - * 어촌계 가입 희망자 풀(pool) 운영 : 어촌계 가입 희망자 상시 파악 유도
 - * 어촌계원 가입 심의제도 도입 : 어촌계 총회의 일방적인 가입 미승인 방지, 수협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음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화로 인해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심화되었고, 농·어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 인구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대 들어서는 어촌에서의 인력난이 문제 시 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고령화가 가중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향후 어촌의 존속까지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실정임

▶ 어촌의 중심인 어촌계, 왜곡된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 인력 유입 저해

- 정부는 어촌의 존속을 위해 귀어·귀촌, 어촌 뉴딜 300 등과 같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어촌의 중심인 어촌계에서 가입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총회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등 왜곡된 폐쇄성*을 가진 곳이 많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왜곡된 폐쇄성 : 조직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이 기득권을 지키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왜곡됨을 의미(필자가 정의함)

▶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도 도입, 실적은 미미

- 정부는 어촌계의 왜곡된 폐쇄성을 개선하고, 어촌사회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조장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도입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실적은 미미함(2021년 실적은 6명에 불과)
- 이에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정점식 의원 외 9명 동법 개정안 발의(22. 4. 8)
 -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 신청자 연령 조건 완화 등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실적 문제점 파악 필요

- 경영이양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가 가지는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동 제도를 도입한 배경, 의의, 실제 운영 현황, 문제점 등을 정리함
 - 직불제도의 발생 및 경과, 공익형직불제도의 발전,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등
 - 제도의 문제점은 운영 상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파악
 - 현실 적용 사례는 제주도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리함
 - 제주도는 나잠어업이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어업이며, 제주 해녀의 계승을 위해서도 본 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임
- * 서귀포수협에서는 본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요청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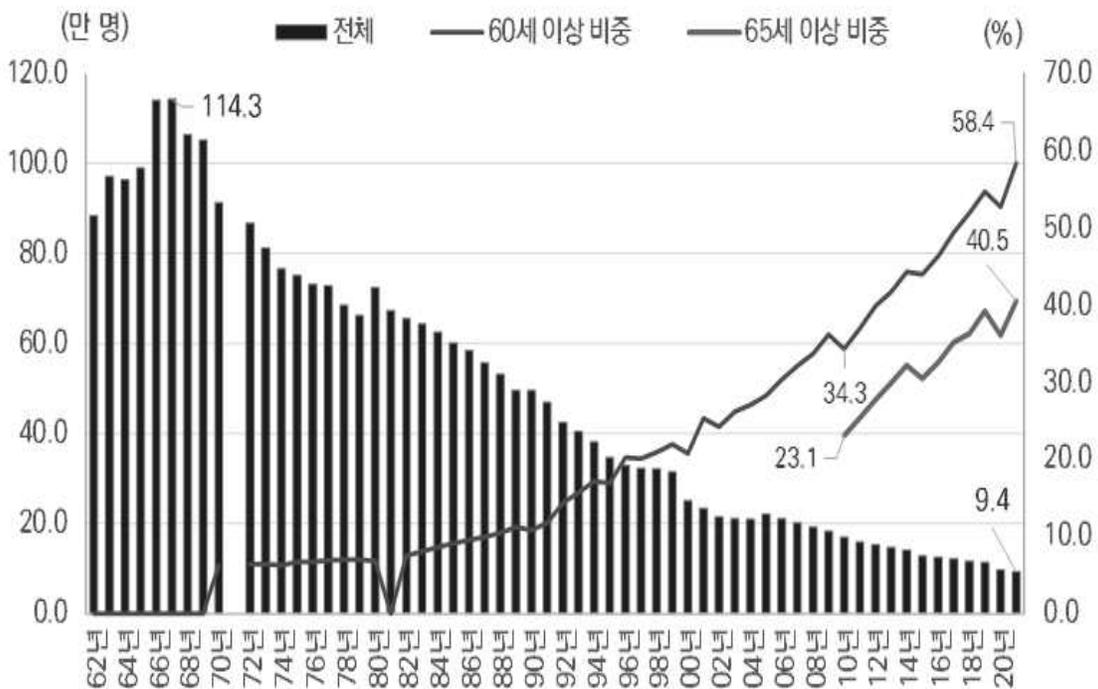
II 어촌 및 어촌계 현황

1. 어촌인구 현황

1) 어가인구 및 고령화 현황

▶ 1960년대 이후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60년대 114만 명에 달하던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 4,000여 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공업화 이후 농촌과 함께 어촌은 공업노동력의 제공처로 전락, 이후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음



주 : 1971년은 자료 없음, 65세 이상 비중은 2010년부터 분석했으며 이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어가인구 및 60세·65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 추이】

- ▶ 60대 이상 어가인구 점점 늘어나기 시작, 2021년 현재 전체의 58.4% 차지
 - 60대 이상 어가인구는 80년대까지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이후 증가 추세 가속
 - 2010년 34.4%이던 비중은 2021년 현재 58.4%로 10여 년 내 24.0%p 상승
- ▶ 어가인구의 고령화율*, 10년 내 두 배 정도 상승
 - 2010년 65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은 23.1%였으나 2021년 현재는 40.5%로 10여 년 내 17.4%p 상승
 -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어촌의 인력난도 갈수록 심각해짐
 - * 고령화율 :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어촌소멸 위기

- ▶ 어촌소멸에 대한 관심 증가
 - 2010년대 중반 이후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을 의미하는 '지방 소멸위험지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어촌소멸에 대한 관심 급증
 -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어촌소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에 기여함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에서 처음 소개됨
 - 각 사회의 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수값의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어촌소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지역	세부 시군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10. 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한편 지방소멸위험에 대해 과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오히려 지역재생 잠재력은 시군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론 제기(송미령 외, 2021a, b)
- 각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통해 여초소멸의 위험에 대해 확인 가능

지역재생잠재력지수

-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을 파악하는 지수
- 출산가능인구 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로 구성
- 다음의 수식으로 산출

$$\text{지역재생잠재력지수} = \frac{\text{둘째 이상 출생률}}{\text{출산가능인구 비율}} = \frac{\frac{\text{둘째 이상 출생아 수}}{\text{총 출생아 수}}}{\frac{\text{15-49세 여성인구}}{\text{총 여성인구}}}$$

- 지수 값이 ‘1 이상’인 경우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1 미만’이면 출생한 자녀 비율이 1명 이하가 되므로 인구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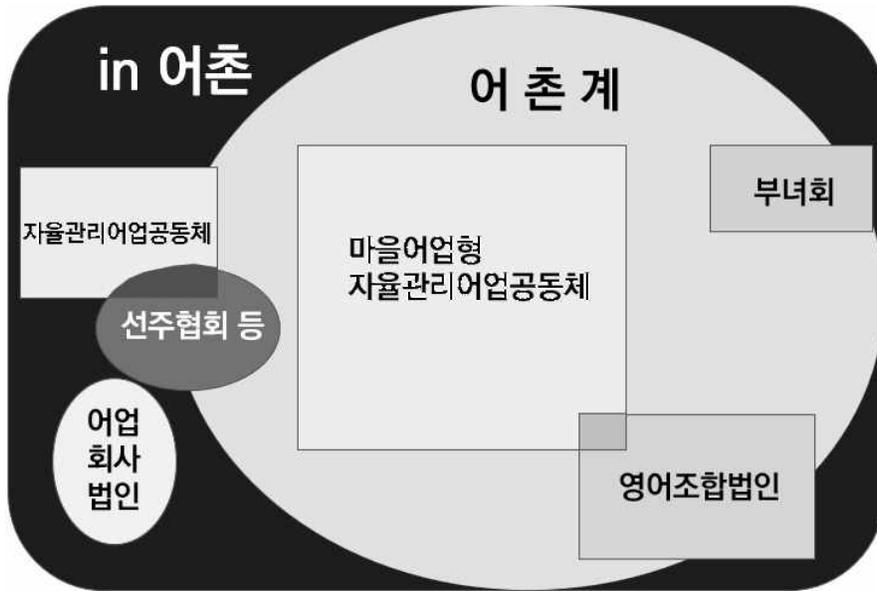
-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산출 결과 시(市)는 평균 1.11, 군(郡) 1.68로 구(區)의 0.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¹⁾, 지역 내 출산 장려와 함께 학령기 아동이 지속가능하게 성장·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송미령 외, 2021b)
- 요컨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어촌은 지역소멸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재생잠재력을 고려하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어촌계 현황

1) 어촌과 어촌계의 관계

- ▣ 어촌은 어촌계를 근간으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촌계가 핵심 조직
 - 어촌에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부녀회, 영어조합법인, 선주협회, 어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어업 관련 조직이 존재함
 - 조직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촌에서 어촌계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대부분의 어업 관련 조직과 연결됨
 - 마을어업형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경우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을 할 경우 조직하는 단체임
 - 영어조합법인, 부녀회, 선주협회 등은 어촌계원이 구성원의 일부인 조직임
 - 따라서 어촌의 근간을 어촌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어촌정책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1) 시군지역에서의 재생잠재력은 도시에 비해 높으나 정주 여건, 교육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시군지역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구성원을 중심으로 본 어촌에서의 어업관련 조직】

2) 어촌계의 의의

- ▶ 어촌계는 우리나라의 전통 중 하나인 ‘계(契)’에 뿌리를 둔 풀뿌리 협동조직
 - ‘계’는 상고시대(삼한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직으로, 조선시대 동계(洞契)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 어업과 관련하여 구한말 어부계, 어망계, 어선계, 어업계, 선구계, 선촌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해 왔음
 -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과 함께 기존 어업 관련한 계를 ‘어촌계’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정식 출범함
- ▶ 어촌계의 성격
 - 법적 성격은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인적결합체인 비법인사단이며,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수협의 하부조직임
 -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어업공동체, 사회적 공동체로서 어촌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공동 노동, 공동경영 등의 행태를 보이므로 경제적 공동체인 어업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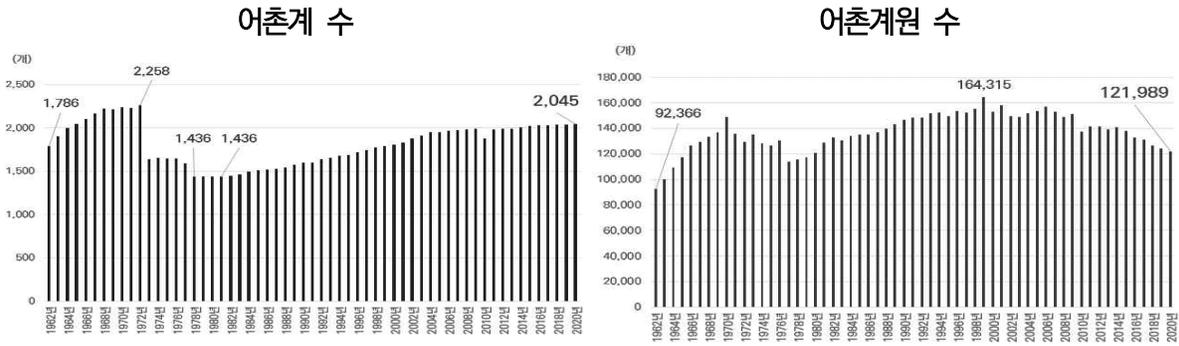
- 어촌을 구성하는 뿌리조직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어로 작업 조직이 결합한 형태인 사회적 공동체로서 어촌공동체임
- 어촌계의 기본적인 성격은 ① 복수목적 지향성, ② 마을어업의 주체, ③ 공익성, ④ 폐쇄성, ⑤ 확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수목적 지향성 : 어촌계는 경제적인 목적 어촌사회 기여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짐
 - 마을어업의 주체 : 마을어장을 활용하여 마을어업을 영위
 - 공익성 : 환경보전, 국토방위, 수산물 생산, 국민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등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
 - 폐쇄성 : 조직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 확장성 : 어촌계를 바탕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물론 마을기업, 영어조합 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조직 결성이 가능

3) 어촌계의 분포

■ 어촌계와 어촌계원의 수 변화

- 어촌계 수는 2,045개로 초창기인 1962년에 비해 259개 증가
 - 「수산업협동조합법」 재정 당시 어촌계 수는 1,786개였으며, 1772년에는 역대 최다인 2,258개로 늘어남
 - 이후 법인어촌계의 지구별수협으로의 전환 및 정비 등을 통해 어촌계의 수를 줄였으며, 1978년과 1981년에는 역대 최소인 1,436개까지 감소했음
 - 2010년 완도군수협의 해산과정에서 어촌계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12월 말 현재 2,045개 기록
- 어촌계원 수도 어촌계의 수와 마찬가지로 1962년에 비해 증가했음
 - 2020년 말 현재 어촌계원은 12만 1,989명으로, 1962년에 비해 2만 9,623명 증가함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62년 이후 어촌계원 수는 증가세를 보이다 197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이후 다시 증가해 1999년에는 역대 최다인 16만 4,315명을 기록 후 다시 감소함
 - 이러한 어촌계원 수의 증가는 어촌계 초기에는 입호제도(入戶制度)*가 유지되었던 반면, 이후 폐지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 입호제도 : 마을의 구성원이 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로써, 전통사회의 자연 촌락에서 마을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지·산야·어장 등을 공동의 별이터로 이용하는 관행임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어촌계 및 어촌계원 수 변화 추이】

어촌계의 지역별 분포

- 어업인구는 18만 6,130명이며, 어촌계원 12만 1,989명, 준계원 1만 2,848명 등 어촌계원과 준계원을 합한 구성원은 총 13만 4,837명임
- 지역별로는 전남이 어촌계의 41.9%, 어촌계 구성원 수의 40.1%가 집중되어 있음
 - 다음으로 경남이 어촌계의 23.1%, 어촌계 구성원의 17.8%를 차지하며, 나머지 지역은 10%에 미치지 못함
 - 다만 충남의 경우 어촌계 구성원 수에서는 전국 대비 12.7%를 차지함
- 한편 어촌 당 구성원 수는 전국 평균 65.9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북이 106.0명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충청 99.8명, 부산 91.7명, 제주 89.5명 순으로 많음
 - 경북의 경우 어촌계당 구성원 수가 41.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 51.5명에 불과함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어촌계		어업인구	구성원				어촌계 당 구성원 수
	비 중	비 중		소 계	비 중	어촌계원	준계원	
합계	2,045	100.0	186,130	134,837	100.0	121,989	12,848	65.9
경인	112	5.5	13,793	9,931	7.4	9,277	654	88.7
강원	74	3.6	4,675	3,811	2.8	3,605	206	51.5
충청	171	8.4	23,942	17,066	12.7	14,837	2,229	99.8
전북	65	3.2	13,991	6,887	5.1	6,169	718	106.0
전남	856	41.9	66,607	54,067	40.1	49,664	4,403	63.2
경북	151	7.4	11,274	6,237	4.6	5,461	776	41.3
경남	473	23.1	34,365	23,962	17.8	21,553	2,409	50.7
부산	41	2.0	5,582	3,761	2.8	2,607	1,154	91.7
제주	102	5.0	11,901	9,115	6.8	8,816	299	89.4

주 : 2020. 12. 31. 기준

자료 :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 어촌계의 지역별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전 연안에 산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어촌계

주 : 구글(Google) 지도를 이용하여 어촌계를 표시했음

【어촌계의 지역별 분포 지도】

4) 어촌계의 사업 및 활동

▶ 관련법 상 어촌계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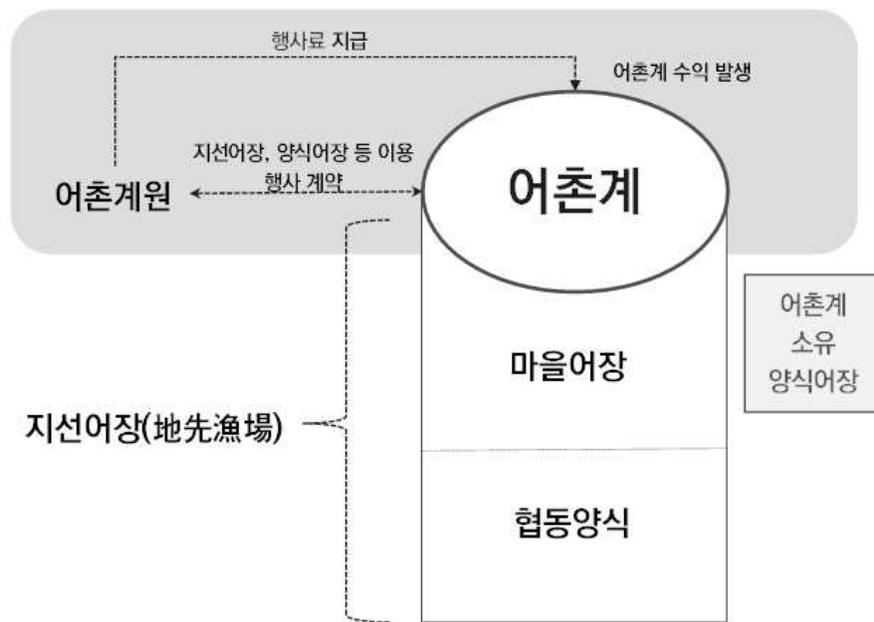
- 어촌계의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14가지로 구분됨

어촌계의 사업
1. 교육·지원사업
2.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어촌계의 주요사업 : 어촌계 소유 어업권의 행사

- 14개 사업 중 어촌계에서 주로 행하는 것은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行使) 등임
-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은 일반적으로 어촌계원과 어촌계 간 행사로 이루어짐
 -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을 일반적으로 지선어장(志先漁場) 이라고 하며, 별도의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기도 함
 - 어촌계의 지선어장 또는 양식어장의 이용·입어(入漁)에 대해 어촌계원과 어촌계간 행사계약을 맺음
 - 행사에 따른 수수료는 어촌계별로 상이하며, 수수료의 징수도 현금, 현물 등 다양함

- 어촌계의 소득은 주로 행사계약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익 규모는 익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임
 - 일반적으로 어촌계 수익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지선어장 및 양식 어장의 행사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임
 - 행사에 따른 수익은 익년도 사업 소요액 정도이며,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사 수수료를 인하하여 행사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가도록 함
 - 따라서 어촌계의 수익금을 어촌계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매우 적음



【어촌계의 지선어장 및 행사계약】

■ 어촌계의 활동

- 어촌계는 수익사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구분해 보면 ① 경영 활동, ② 환경 보존 활동, ③ 지역사회 기여 활동, ④ 어촌계 제도 운영 등임
- 경영활동은 어업활동과 어업외 활동을 구분
 - 어업활동 : 지선어장을 이용 행사계약
 - 어업 외 활동 : 체험어장, 마을기업, 임대사업 등
- 환경 보존 활동 : 어촌계 구역내 어장을 비롯한 마을 환경 보존 활동임
 - 어장관리활동 : 구제작업, 어장청소 등
 - 종묘방류, 어장의 순환이용, 자체 어장 이용 규칙 제정 및 운영 등

-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기여하는 활동임
 - 풍어제 등 어업 관련 행사 주최
 -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마을행사 참여
 - 장학금 지급, 봉사활동 참여 등
- 어촌계 제도 운영 : 수산업협동조합의 산하 기구로 어촌계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활동
 - 어업생산물 관리, 행사계약, 어장이용 사업 계획 수립
 - 어장 및 바닷가 청소
 - 총회 개최, 어촌계원 가입 심사 등



【어촌계의 4대 활동】

Ⅲ 경영이양직불제도의 현황 및 사례

1.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배경

1) 우루과이 라운드(UR)와 직접지불제도

■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WTO 출범

- 우루과이 라운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 → WTO 출범
 - 농산물 부문의 경우 기존에는 협상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나 UR부터 포함됨

■ 직접지불제도 도입

- UR 후 1995년 WTO 출범으로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 및 각종 생산보조정책 시행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농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를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
 - 직접지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임
- 농업부문의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년 도입되었고, 직접지불제도 중 제일 먼저 시행됨
- 이후 다양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2) 직접지불제도의 경과

■ 직접지불(direct payment),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도입

-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국가가 농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 방식임

- 과거 가격지지정책이 WTO 출범으로 금지되면서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민의 줄어든 소득만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임
- 이는 향후 농산물 시장 외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농촌경과 및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과 같은 공공재적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금인 공익형 직불제로 발전
- 농업부문에서 수산부문으로 확대됨
-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직불제, 2001년 논농업 직불제 도입
- 2002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생산조정제 추가

▶ 경영이양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주요 직불제도

- 경영이양직불제는 도입 이후 신청 연령, 단가, 지급 방법, 대상 등에 변화를 보임
 - 신청 연령은 기존 63~69세에서 65~74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상 농지는 논에서 논과 밭, 과수원으로 확대
- 쌀소득보전 직불제 :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해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
 -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불제도
 - 논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
- 이 외에도 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업에서도 도입 운영

- 2010년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도입되었으며, 지급대상과 금액은 점차 상향됨
- 어업인 등은 대상 지역 및 금액 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

2. 공익형 수산직불제도의 도입

1) 도입 배경

- ▶ 단순 소득 보전에서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접근으로 변화
 - 농업부문에서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직불제의 역할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 쌀 생산 중심직불제는 생산과잉,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문제의 부작용
 - 식량의 양적 확보 보다는 자연환경 보전, 식품안전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짐
- ▶ 농업부문에서의 논의가 수산부문에서도 이루어짐
 - 수산부문에서도 공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농업부문의 공익형 직불금 추진과 함께 도입

2) 공익형 수산직불제도 현황

- ▶ 관련법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 관련법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 ②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③ 해양영토 수호, ④ 어촌사회 유지
- ▶ 공익형 수산직불제도의 종류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관련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관련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관련법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관련법 :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3. 수산부문 경영이양직불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목적은 젊은 인력의 어촌계 유입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목적 : 어업경영 이양(어촌계원 탈퇴) 및 고령 은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의 어촌계 유입 촉진
- 수협의 역할
 - 홍보 지원 :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센터 운영, 수협 홍보 매체 활용, 현수막 제작·게시 등
 - 행정지원 : 어촌계 기초자료 제공, 어촌계 교육(결산보고서 작성, 계원명부 작성), 설명회 개최지원 등

▶ 주요 내용

- 직불금 지원 대상 : 어촌계원 자격 10년 이상 유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지급조건 :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탈퇴해야 함
 -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며 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됨
-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 어촌계 소득 증명 자료 및 계원명부 필요
- 지급 기준 : 어촌계 1인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기준】

어촌계 1인 평균 결산 소득	연간 지급금액
200만원 이하	120만원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1인 평균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예산 및 실적

- 정부예산 22년도 39억 원
- 실적 : 21년도 6명, 총 2,280만 원 지급

4) 관련법 개정법률안 내용

▣ 정점식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법률개정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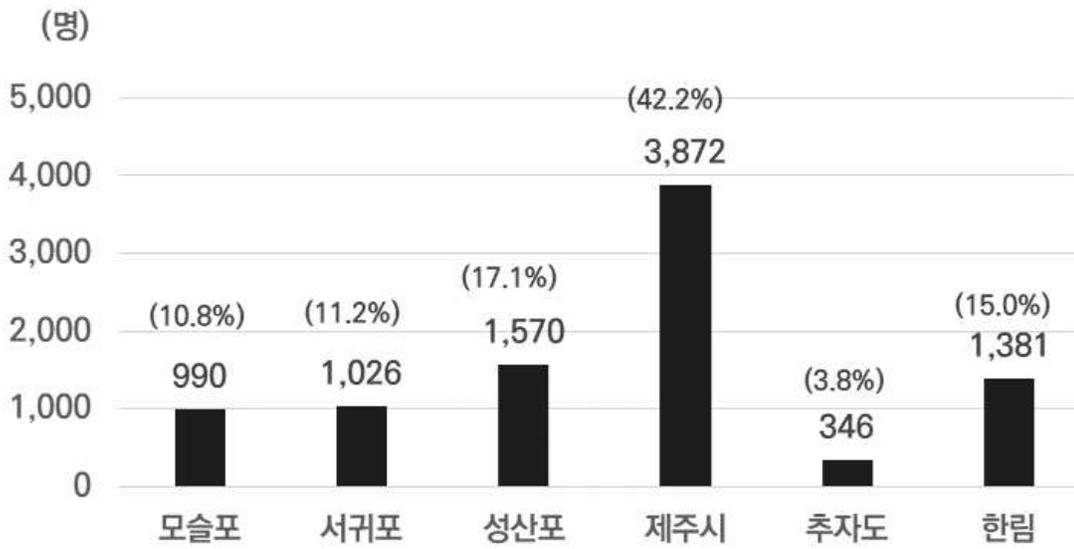
-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22.4.8. 발의되었음
- 현행 직불금 신청 연령을 확대·완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을 골자로 함
 - 어촌계원 자격 유지 10년, 다만 인가를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은 어촌계의 경우 인가 시점부터 어촌계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
 - 사업추진 신청기관 : 기존 읍·면·동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

4.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사례

1) 제주도 어촌계

▣ 제주도 어촌계 현황

- 제주도의 어촌계는 102개, 제주시수협이 34개로 전체의 33.3% 차지
 - 서귀포수협 19개 (11.2%), 모슬포수협 13개(12.7%), 성산포 13개 (12.7%), 추자도 5개 (4.9%), 한림수협 18개 (17.6%) 등 임
- 어촌계원은 9,185명이며, 어촌계수와 마찬가지로 제주시수협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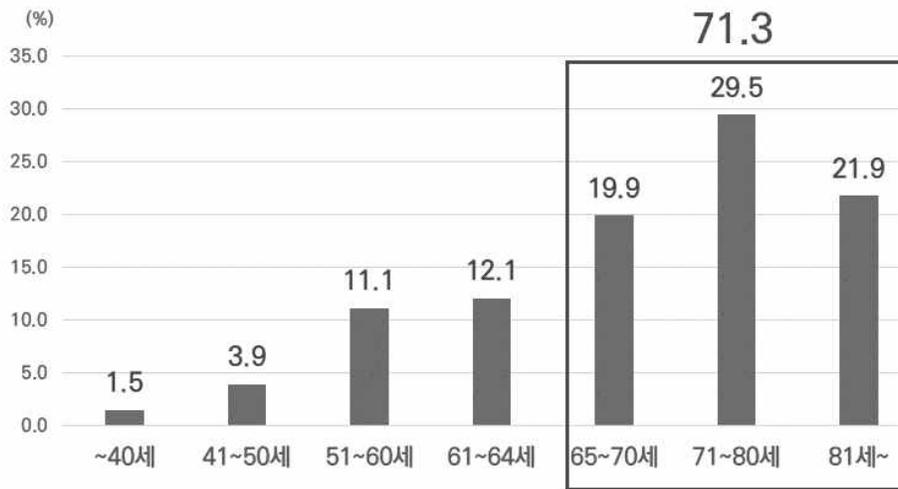


주 : 2020. 12. 31. 기준
 자료 :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제주의 어촌계원 현황】

■ 어촌계원의 연령분포

- 제주 어촌계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65세 이상 어촌계원이 전체의 71.3%에 이르고 있음
 - 연령별로는 71~80세가 전체의 29.5%로 가장 많으며, 81세 이상이 21.9%, 65~70세는 19.9% 등의 순임
 - 61~64세와 51~60세 어촌계원은 각각 전체의 12.1%, 11.1%를 차지함
 - 40세 이하 어촌계원의 비중은 1.5%에 불과함



주 : 2020. 12. 31. 기준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 자료

【제주도 어촌계원의 연령별 분포】

- 수협별로는 성산포수협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등이 상대적으로 어촌계원의 고령화가 심각함
 - 성산포수협은 65~70세 20.0%, 71~80세 36.0%, 81세 이상 24.7%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80.7%를 차지
 - 제주시수협은 71~80세와 81세 이상이 각각 27.6%, 27.9%였으며, 특히 81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한림수협의 71~80세와 81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각각 29.6%, 22.0%임
- 모슬포수협, 서귀포수협, 추자도수협은 71~80세의 비중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제주도의 수협들은 이러한 어촌계원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주도 내 수협별 어촌계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구 분	~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70세	71~80세	81세~
모슬포수협	0.8	1.6	8.5	14.6	29.2	29.5	15.7
서귀포수협	4.0	8.9	18.6	13.0	18.6	28.3	8.6
성산포수협	0.6	2.0	7.7	9.0	20.0	36.0	24.7
제주시수협	0.7	2.3	10.1	12.5	18.9	27.6	27.9
추자도수협	6.4	13.4	18.5	13.6	17.9	25.3	4.9
한림수협	1.9	5.6	12.1	11.4	17.4	29.6	22.0

주 : 2020. 12. 31. 기준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 자료

2) 제주 해녀

- ▶ 나잠어업, 제주도 어촌계의 대표적 특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제주도의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나잠어업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짐
 - 해녀는 나잠어업의 주체로,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통해 마을어장에서 어업을 영위함
 - 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몸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호흡조절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제주의 전통어업을 영위하는 주체 중 하나임
 -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
 - 우리나라의 경우 종묘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에 지정
 - 국가중요어업유산 :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임
 - 제주해녀어업은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임(2015.12.21 지정)
 - 제주의 나잠어업, 제주해녀문화 계승을 위해 ‘해녀학교’를 통해 해녀를 육성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어촌계 가입을 조장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해녀학교는 제주도에 두 곳으로 제주시는 한수풀 해녀학교, 서귀포시에는 법환 해녀학교가 있음



【제주의 해녀학교 현황】

3) 제주의 해녀 현황

▣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심각

- 제주의 해녀는 총 8,477명으로 제주시에 4,414명, 서귀포시는 4,033명임
- 이 중 현직 해녀는 3,437명으로 전체의 40.7% 차지함
 - 제주시 2,049명, 서귀포시 1,368명임

【전현직 해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전현직 합계	8,447	4,414	4,033
현직 합계	3,437	2,069	1,368
비 중	40.7	46.9	33.9

자료 : 제주 해녀박물관

- 수협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수협에 1,449명의 해녀가 소속되어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한림수협 537명(15.6%), 서귀포수협 522명(15.2%), 성산포수협 512명(14.9%)이었으며, 모슬포수협과 추자도수협은 각각 334명(9.7%), 83명(2.4%)임
- 해녀의 연령분포는 어촌계원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70~79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70~79세의 비중은 44.1%, 60~69세는 28.8%, 80세 이상 18.3%이며, 나머지 연령대는 10%에 미치지 못함
- 추자도수협의 경우 50대 이하의 해녀가 5명에 불과하며, 성산포수협 30명, 모슬포수협 34명 등으로 적음

【제주 현직 해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계	비율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437	100.0	3	27	53	218	990	1,516	630
비율	100.0		0.1	0.8	1.5	6.3	28.8	44.1	18.3
제주시수협	1,449	42.2	0	5	16	111	435	566	316
서귀포수협	522	15.2	0	10	10	24	135	265	78
한림수협	537	15.6	0	4	12	40	159	215	107
추자도수협	83	2.4	0	1	2	2	28	43	5
성산포수협	512	14.9	1	5	5	19	138	274	70
모슬포수협	334	9.7	2	2	8	22	95	153	52

자료 : 제주 해녀박물관

4)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지원 4대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의 육성 및 계승을 위해 ① 복지, ② 소득, ③ 작업환경 개선, ④ 해녀 문화·전승 등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
- 복지 분야 : 해녀 진료비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비 지원,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어촌계 신규 가입비 지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등 8개 사업

- 소득 분야 : 수산종자매입방류, 마을어장 경영평가우수어촌계 지원,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 패조류투석, 패조류용 어초투하, 해조류 PP마대 지원, 소라 가격 안정 지원, 마을어장 복원, 해녀문화 홍보마켓운영 지원,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등 10개 사업
- 작업환경 개선 분야 : 해녀탈의장운영 지원,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해녀탈의장 보수, 어촌계 작업 도구 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안전 조업 장비 지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등 7개 사업
- 해녀어업 문화·전승 분야 :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제주해녀축제 지원, 해녀공연 운영지원,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해녀박물관 운영, 해녀어업 문화복원 정비, 제주해녀굿 지원,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등 8개 사업

■ 고령해녀 및 은퇴수당 지급

- 해녀 은퇴수당의 경우 고령해녀수당 지급자 중 은퇴를 희망하는 80대 이상의 해녀를 대상으로 함
- 지원 세부 내용
 - 고령해녀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연간 240만원) 지원
 - 은퇴수당은 은퇴를 희망하는 80대 이상의 해녀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연간 360만원) 지원

5)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그러나 실적은 없음

- 제주도 내 수협을 중심으로 어촌계 홍보, 상담 등을 실시했음
 - 어촌계원 대상 제도 취지,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설명
 - 개인별 상담 실시
- 실적은 없고, 어업인들도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액, 소득 증빙 방법, 대체자 발굴 등의 어려움 지적
 - 어촌계원 유지가 경영이양직불제 참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

1) 수익 증빙 여건의 한계

▶ 결산보고서 확보의 어려움 직면

- 경영이양직불금은 어촌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산정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촌계 운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결산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어촌계 회계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고려 필요
 - 어촌계 결산보고에 대한 수협의 교육 및 지도 강화 등 필요
-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수익 증빙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함

2) 과소한 직불금 지급 규모

▶ 직불금 규모가 작아 어촌계원 자격 이양에 부정적

- 어촌계원은 행사계약을 통해 마을어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결산을 통해 어촌계 초과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 받음
-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계를 탈퇴하면서 마을어장 등의 이용권을 신규 대체자에게 이양하는 대신 어촌계가 배당하는 지급액을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보장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촌계는 통상 계획된 어촌계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만큼 사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므로 배당액의 금액이 크지 않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어촌계와의 행사계약을 할 수 있고, 마을어장 입어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경영이양직불제도에 참여하지 않음

- 즉, 어촌계원 자격 유지를 통한 소득이 경영이양에 따른 직불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어촌계는 어촌의 중심으로 어촌계원이 가지는 해당 마을에서의 발언권, 영향력 등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경영을 이양할 경우 즉, 어촌계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마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음

3) 어촌계 가입 희망자 발굴의 어려움 및 신규계원 가입의 총회 승인 불투명

▣ 후계어업인 발굴해도 총회에서 어촌계 가입 승인은 불투명

-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어촌계원이 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이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촌계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
 - 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됨
-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촌계 가입 희망자는 가입금, 거주요건 등 일련의 가입요건을 갖추 경우 어촌계 가입이 가능함
- 이에 귀어자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한다고 해도 해당 귀어자가 가입금, 거주요건 등의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어촌계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함
 - 어촌계의 가입요건은 어촌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기존 어촌계원과의 상호 신뢰 및 형평성을 기하는 수단임(이창수·최완현, 2017)
 - 가입요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 또한 어촌계원 자격 이양은 기존 어촌계원의 기득권을 인정·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어촌계가 본연적으로 가지는 자율성 및 순수성을 훼손하고 왜곡함을 정부가 조장하는 모습임

4) 제도적 한계

- ▶ 경영이양직불제는 귀어(歸漁)를 조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최초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업부문에서 농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며,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수산부문의 경영이양직불제는 귀어 정책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도의 대상자는 어업경영을 포기하지 않음
 - 정부는 귀어자의 어촌계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귀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통해 어촌계 가입을 조장하고자 함
 - * 귀어정책의 부진은 어촌계 가입이 쉽지 않은 점도 있으나 정책입안자와 귀어인들이 어촌의 삶을 도시생활의 잣대로 이해하는 점, 수산제도에 대한 몰이해 등을 더 큰 원인으로 보아야 함
 - 어촌계원 자격만을 이양하고, 개인의 어업경영은 유지됨
 - 어촌계의 어촌계원 자격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여, 자칫 이를 두고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 어촌계원자격의 매매 등
 - 제도 도입 전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논의는 수산업의 어획노력량을 줄이기 위한 조장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
 - 요컨대 수산부문의 경영이양직불제도는 농업부문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의 정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

2. 개선 방안

1) 어촌계 수익 증빙 여건의 개선

- ▶ 어촌계 수익,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도 필요
 - 어촌계 표준 회계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어촌계의 결산을 용이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표준 회계시스템 개발 및 보급 필요
 - 어촌계 결산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업무 강화

- 어촌계 결산업무의 수행에 대한 어촌계 대상 정기 교육 강화
- 전국 어촌계장 대상 교육의 의무화 고려
- 수협이 어촌계 감사 등 지도업무 강화 필요

2) 직불금 지급금액 상향

▶ 단기적으로 지급금액 상향, 장기적으로 지급 기준 변경 필요

- 지급 기준 변경 : 어촌계 배당금에서 어촌계원 개인소득으로 변경
 - 어촌계원의 개인소득을 증빙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금액 결정
 - 단, 어촌계원의 개인소득 중 어촌계와의 행사계약 및 마을어장 입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단기적으로는 지급금액 상향 조정

3) 직불제 대상 조건의 완화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연령 확대

-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 및 건강 개선으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 연령대 확대되었으며, 어업인 역시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어업활동 유지
- 우리나라 기대수명도 '90년 71.1세, '00년 74.4세, '10년 80.2세, '83.5세로 늘어나고 있음*
 -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 상한 연령 조정을 통한 대상 기간 확대 고려 : 예시) 기존 10년(65~75세)에서 15년(65~80세)

▶ 경영이양 대상 후계어업인 범위 확대

- 현재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계원 자격 이양을 희망하는 자가 후계어업인을 찾아 매칭(matching)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후계어업인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게다가 후계어업인의 대상에서 직계자손을 제외하고 있어 후계어업인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됨

- 그러나 귀어자는 어촌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무연고자가 귀어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 함
- 즉 후계어업인의 대상에 직계자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4) 어촌계 가입 희망자 발굴 개선

- ▶ 어촌계 가입 희망자 상시 파악하고, 어촌계 가입을 위한 별도 제도 도입 필요
 - 어촌계 가입 희망자 풀(pool) 운영
 - 귀어자 및 어촌계 가입 희망자를 어촌계에서 상시 파악
 - 어촌계원 가입 심의제도 도입
 - 어촌계 자격을 양도받은 자, 어촌계 가입 신청자 등의 원활한 어촌계 가입을 위해 어촌계원의 자질을 심의하는 비상설 기구 도입
 - 어촌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협, 지자체 포함하며, 심의기구의 운영 주체는 어촌계 인가권자 등으로 검토 가능
 - * 어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설정
 - 심의기구에서는 총회에서 가입 거부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어촌계에 권고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어촌계 총회의 일방적 가입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검토 필요

3. 정책 제언

- ▶ 경영이양직불제 전면 개편 고려해야 함
 -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짐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실행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필요한 부문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어획노력량 감소 및 수산자원관리
 - 대상 : 어선어업인(어업허가 소유자)
 - 기대효과 : 귀어 활성화, 귀어 시 어촌계의 왜곡된 폐쇄성 완화

■ 고령어업인에 대한 은퇴제도 도입 고려 필요

- 고령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의 유지를 위한 은퇴제도 도입 검토
-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필요

■ 어촌계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어촌 이해도 제고

- 어촌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촌계 정보의 종류는 많지 않고, 접근하는 경로도 해당 어촌계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할 정도로 제한적임
- 이에 어촌계 정보구축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 있음

【참고문헌】

- 김태훈 박지연(2018),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2004), 「밭 경영이양직불제 및 경영이양을 연금연계 추진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안」
박동규·김명환·이규천·김철민·성진근·사공용·이명현(2000), 「논 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심재현·서형주(2021a), 「2020 지역발전 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21b),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KREI 농
정포커스 제197호.
이창수·최완현(2017), 어촌계 가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산경영론집 48-1.
충청남도(2013),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해양수산부(2019),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보도자료

행정안전부(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인터넷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likms.assembly.go.kr)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jeju.go.kr/haenyeo/index.htm)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is.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frt/a01/frtMain.do)

CPTPP 협정에 대한 어업인 인식현황 및 시사점

박지훈 연구위원
(shjpark@suhyup.co.kr)

목 차

요 약	38
I. 조사 개요	40
II. 조사 결과	43
III. 시사점	60

요약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등에 대한 어업인 인식 현황 파악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PTPP 가입 반대운동 및 대정부 활동에 활용
 - 조사대상
 - 수협 회원조합 91개소 관내 어업인 대상
 - 조사기간 및 표본수
 - 조사기간 : 2022년 2월 3일 ~ 11일
 - 표본수 : 4,986명
 - 조사항목
 - 4개 대분류*,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
- * 응답자 특성, CPTPP 관련 인식도, CPTPP 대응 관련 사항, 수산보조금에 관한 사항

📌 조사 주요결과

- CPTPP 협정 및 정부 가입추진 인지정도 :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CPTPP 협정과 정부의 가입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함
- CPTPP 인지채널 :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 정도가 30.6%로 가장 큼
- CPTPP 피해분야 인식도 : 전체 응답자의 70.7%, 수산업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CPTPP 수산업 영향 인식도 : 전체 응답자의 77.8%,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
- CPTPP 가입 수용도 : 전체 응답자의 74.0%, 정부의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
- CPTPP 가입후 어업활동 지속의향 : 전체 표본 어업인의 22.9%, 어업활동을 중단
- CPTPP 가입 반대운동 참여의향 : 전체 응답자의 81.3%, CPTPP 가입 반대운동에 참여
- CPTPP 가입 반대운동 방법 선호도 : '어업인집회 개최'가 37.8%로 가장 높음
-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정도 : 전체 어업인의 80.6%,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
- 수산보조금 어업경영 영향 : 전체 응답자의 90.9%, 수산보조금 지원이 어업경영에 도움
- 어업경영 수혜 수산보조금 유형 : 어업용 면세유 43.2%로 가장 높고,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35.6%, 수산정책보험 7.2% 등의 순

주요 시사점

- CPTPP에 대한 對어업인 적극 홍보 필요, 연안어업 어업인 더욱 할애 필요
- ‘어업인 접점’ 채널을 활용한 對어업인 홍보효과 극대화
- 對어업인 홍보시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강조, 경각심 일깨울 필요
- 전국적·대규모 ‘어업인집회’ 개최통해 국민 여론형성을 위한 수산업 피해의 심각성 노출
- 수산보조금은 어업경영에 직결됨으로 설문 결과를 정부 건의안에 반영, 정부의 호혜적 어업인 대책지원 마련 유인할 필요
- CPTPP 가입 시 어업활동 유지 불가능, 어촌소멸 현실화 우려를 대비한 다각적인 어업인 경영유지 지원책 마련 절실

I 조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조사 추진배경

-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17.1) 이후, CPTPP*로 명칭 변경 ('17.11),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11개국** 참여로 '18년 12월 발효

*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참여국(총 11개국)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 정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무역협정
- 가입연도 :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05) → 미국·호주·페루('08) → 베트남·말레이시아('10) → 멕시코·캐나다('12) → 일본('13) → 미국탈퇴('17)

【CPTPP 추진 일지】

- '13.11 : 한국정부, CPTPP 전신인 TPP 협정 공식 관심표명
- '17.01 : 미국, TPP 탈퇴
- '17.11 : 미국제외 11개국, CPTPP로 명칭 변경
- '18.03 : 일본 주도 11개국 참여한 CPTPP 출범
- '18.12 : CPTPP 발효
- '21.09 : 중국과 대만 가입 공식 신청
- '21.12 : 우리나라 가입 추진 공식화(홍남기 부총리, CPTPP 가입신청 시사)

- 최근, '21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신청 추진 및 사회적 논의 착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부산 '21.12.16, 춘천 '22.1.11, 대전 1.13, 제주 1.17, 전남 1.18) 및 공청회(3.25) / 해수부 : 수산업계 간담회 개최(1.7)

- 이에, CPTPP 협정에 대한 어업인 인식 현황조사 필요성 대두
 - 어업인의 CPTPP 인식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대응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목적

-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등에 대한 어업인 인식 현황 파악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PTPP 가입 반대운동 및 대정부 활동에 활용

2. 조사설계

■ 조사 대상

- 수협 회원조합 91개소 관내 어업인 대상
 - 지구별 수협 70개소, 업종별 수협 21개소
 - 지역(개소) : 경인 8, 강원 9, 충남 8, 전북 4, 전남 20, 경북 9, 경남 19, 부산 7, 제주 7

■ 조사기간 및 표본수

- 면접을 통한 자계식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년 2월 3일 ~ 11일
 - ※ 수협중앙회 전국 조합 설명회 동시 진행
- 전체 표본수 4,986명

■ 조사 항목

- 4개 대분류,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
 -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속조합, 종사어업, 종사기간
 - CPTPP 관련 인식도 조사(6개 항목) :
 - CPTPP 협정 인지정도 , CPTPP 인지채널, CPTPP 정부가입추진 인지정도, CPTPP 피해분야, CPTPP 수산업 영향 인지정도, CPTPP 수산업 영향 인식도

- CPTPP 대응 관련 사항(4개 항목) :
 - CPTPP 가입 수용도, CPTPP 가입후 어업활동 지속의향, CPTPP 가입반대 운동 참여의향, CPTPP 가입반대운동 방법의 선호도
- 수산보조금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정도, 수산보조금 어업경영 영향, 수혜 수산보조금 유형(중복응답), 어업용 면세유 유지필요성,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유지 필요성

【조사 설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목적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인식도 조사
조사 대상	회원조합(지구별 70개소, 업종별 21개소) 관내 어업인
조사 업종	연근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조사 방법	자계식 면접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2년 2월 3일 ~ 11일 ※ 수협중앙회 전국 조합 설명회 동시 진행
조사 표본수	4,986명
조사 항목 (15)	I. 응답자 특성(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속조합, 종사어업, 종사기간) II. CPTPP 관련 인식도 조사(6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PP 협정 인지정도 • CPTPP 인지채널 • CPTPP 정부가입추진 인지정도 • CPTPP 피해분야 • CPTPP 수산업 영향 인지정도 • CPTPP 수산업 영향 인식도 III. CPTPP 대응 관련 사항(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PP 가입 수용도 • CPTPP 가입후 어업활동 지속의향 • CPTPP 가입반대운동 참여의향 • CPTPP 가입반대운동 방법 선호도 IV. 수산보조금에 관한 사항(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정도 • 수산보조금 어업경영 영향 • 수혜 수산보조금 유형(중복응답) • 어업용 면세유 유지필요성 •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유지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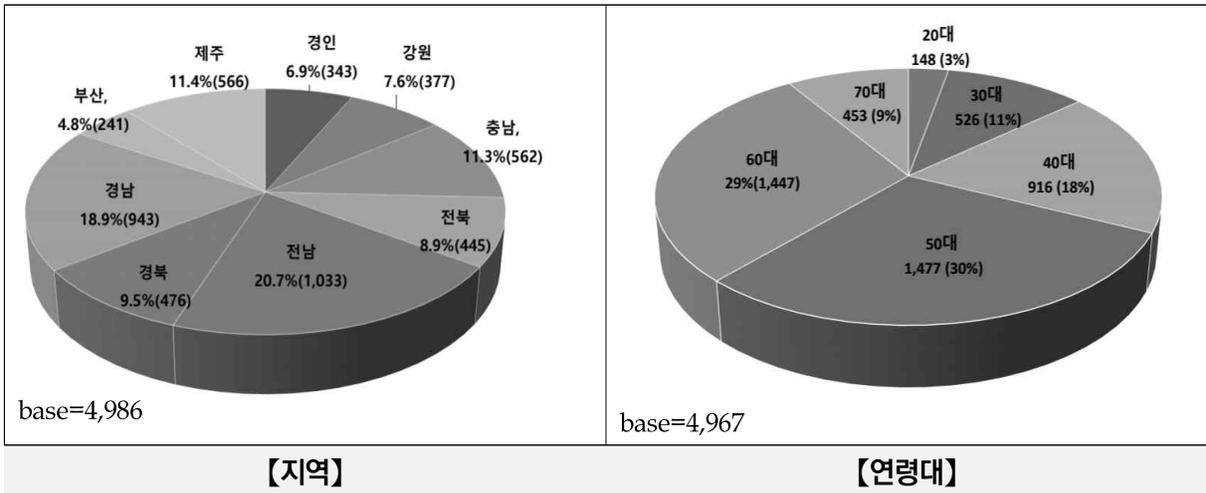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지역, 연령, 종사기간 분포

- 전체 9개 지역 중 전남이 20.7%(1,033명)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8.9%(943명), 제주 11.4%(566명), 충남 11.3%(562명), 경북 9.5%(476명) 등의 순
- 응답자 연령은 5·60대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9.0%(2,924명)를 차지, 반면 20대 청년 어업 경영인은 3%(148명) 수준
- 응답자의 어업 종사기간은 평균 1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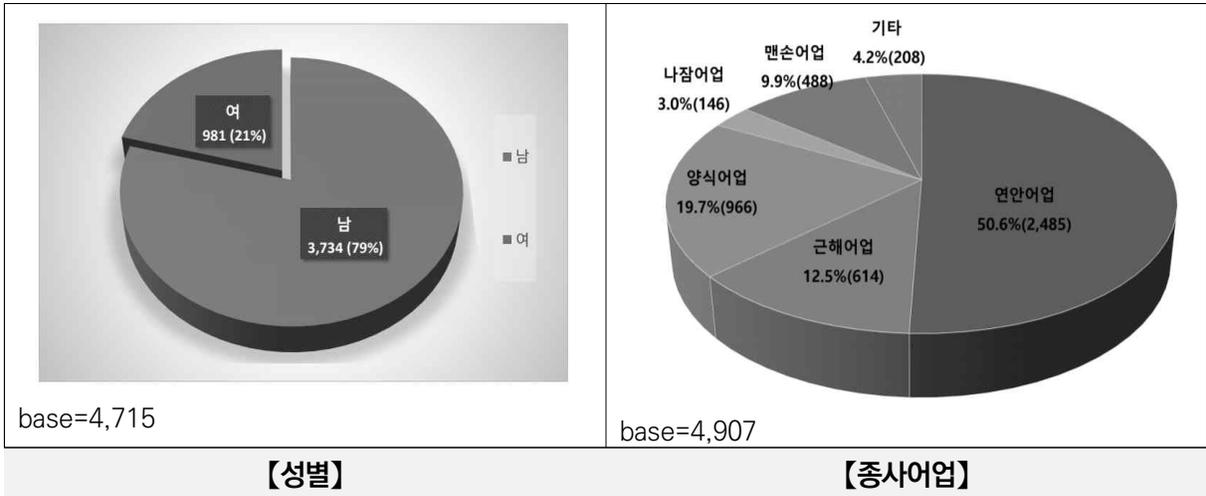
【응답자 지역 및 연령대 분포】



성별 및 종사어업 분포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전체의 79.0(3,734명)%, 여자는 21%(981명)
- 종사어업 형태를 보면,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50.6% (2,485명)로 가장 많고, 양식어업 19.7%(966명), 근해어업 12.5%(614명), 맨손어업 9.9%(488명)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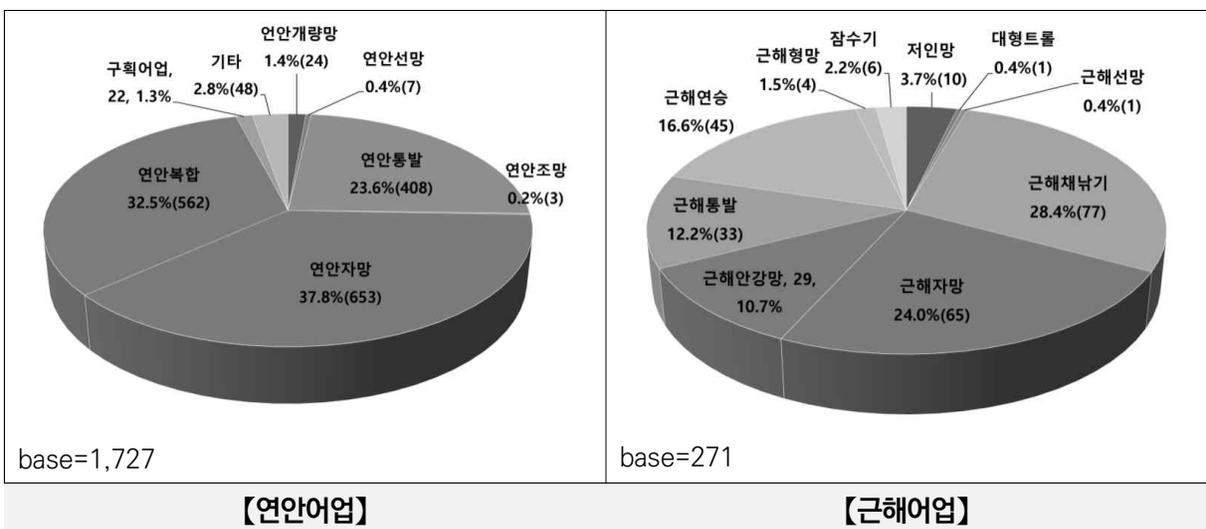
【응답자 성별 및 종사어업 분포】



연근해어업 업종별 분포

- 연안어업 업종 중 연안자망어업이 37.8%(653명)으로 가장 많고, 연안복합 32.5%(562명), 연안통발 23.6%(408명) 등의 순
- 근해어업 업종에서는 근해채낚기어업이 28.4%(77명)으로 가장 많고, 근해자망 어업 24.0%(65명), 근해연승어업 16.6%(45명), 근해통발어업 12.2%(33명), 근해안강망어업 10.7%(29명)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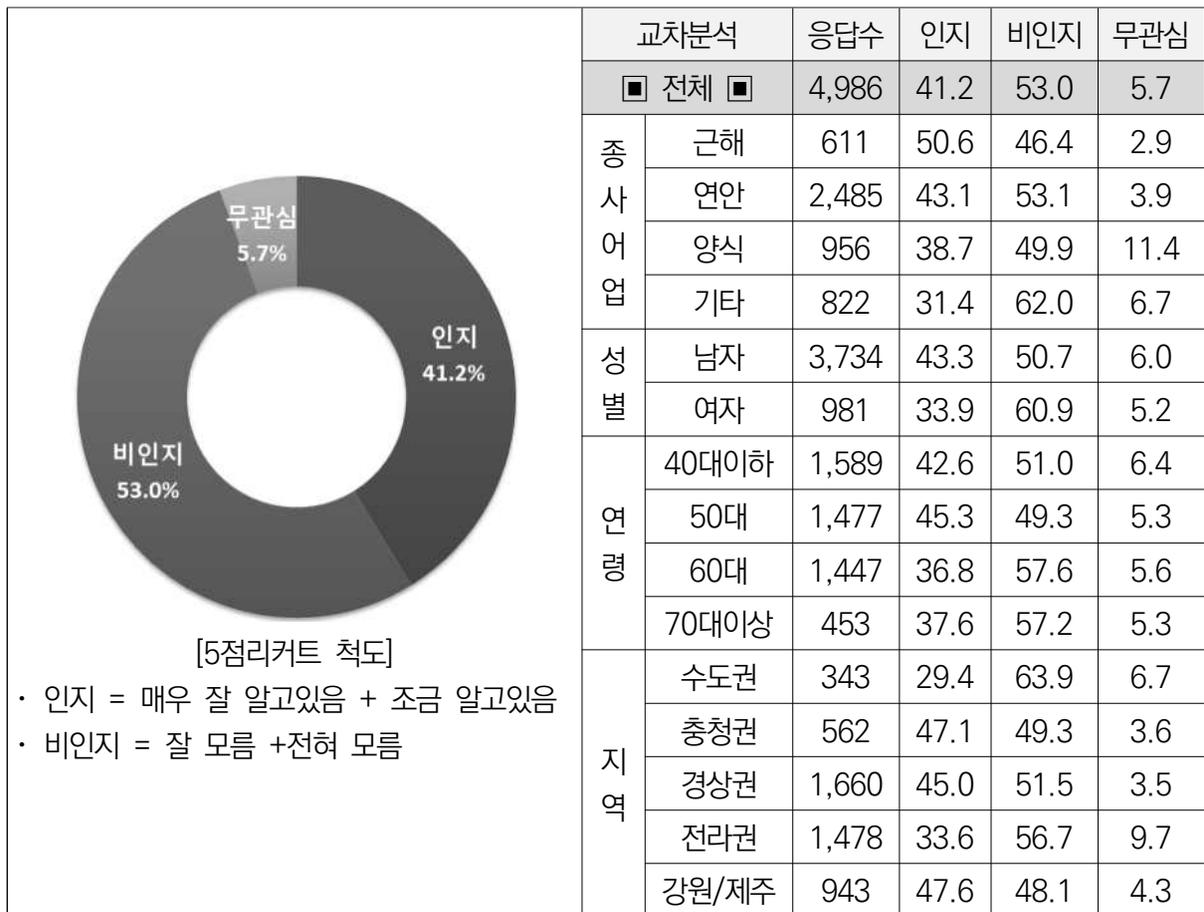
【응답자 업종별 분포】



2. CPTPP 관련 인식도

- ▶ CPTPP 협정 인지정도 : CPTPP 협정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0%(잘 모름 + 전혀 모름)가 CPTPP 협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반면, CPTPP 협정을 인지하고 있는 어업인은 전체의 41.2%(매우 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수준
 -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CPTPP 협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정도는 연안어업 53.1% ≧ 양식어업 49.9% ≧ 근해어업 46.4% 순으로 높음
 - 성별로는 여자(60.9%)가, 그리고 연령대는 60·70대(각 57.6%, 57.2%)가 상대적으로 CPTPP 협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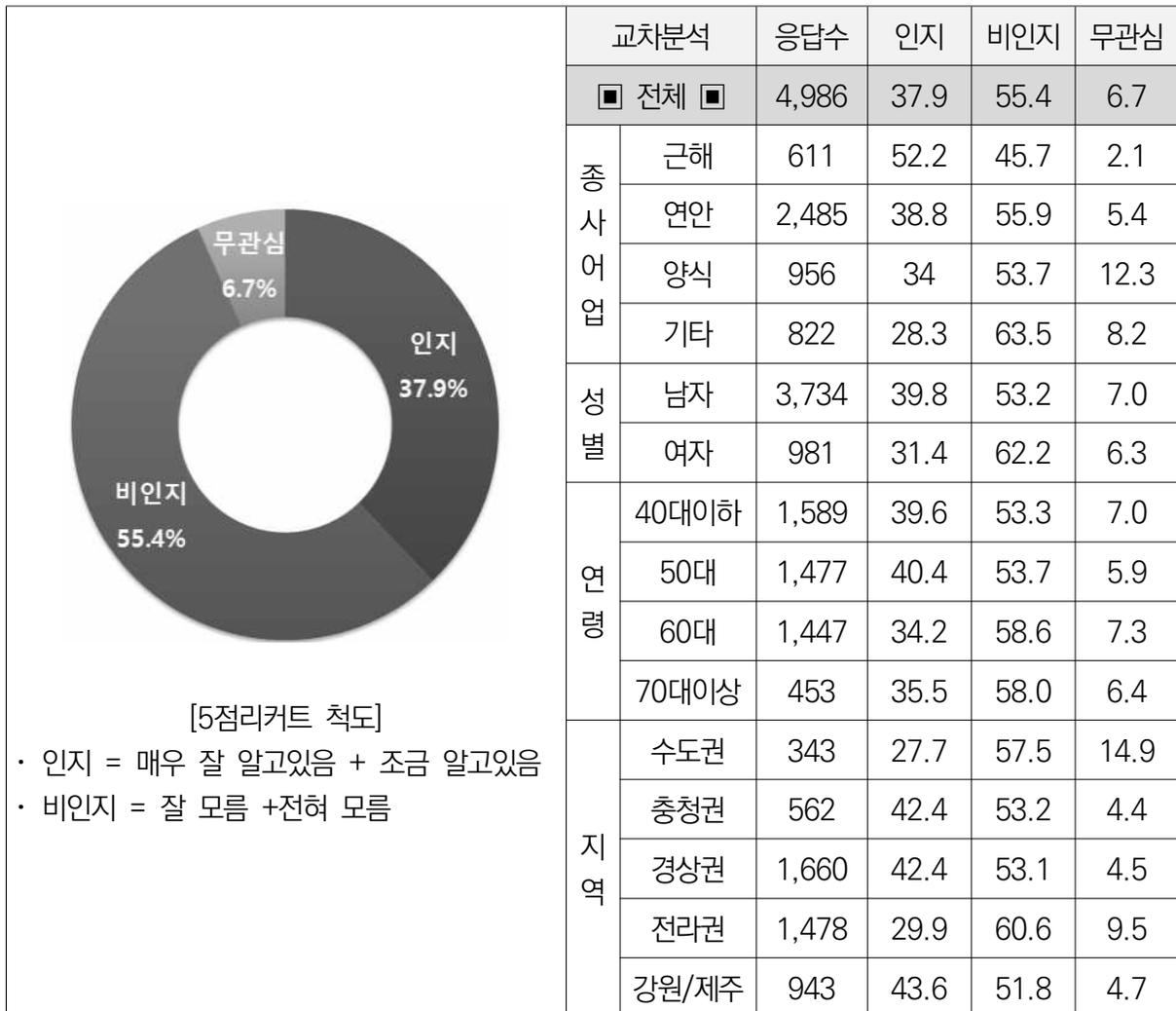
【CPTPP 협정 인지정도】



▶ CPTPP 정부 가입추진 인지정도 :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중인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55.4%(잘 모름 + 전혀 모름)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37.9%(매우 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 업종별로, 정부의 CPTPP 가입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정도는 연안 어업 55.9%» 양식어업 53.7%» 근해어업 45.7% 순
- 성별로는 여자(62.2%)가, 그리고 연령대는 60·70대(각 58.6%, 58.0%), 지역별로는 전라권(60.6%)이 상대적으로 CPTPP 협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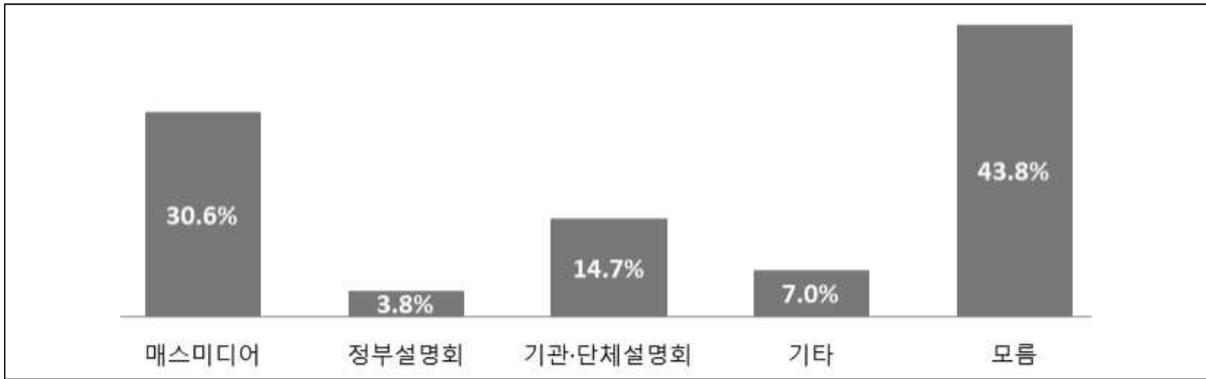
【CPTPP 정부 가입추진 인지정도】



■ CPTPP 인지채널 : CPTPP 협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 정도가 30.6%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기관·단체설명회(14.7%), 기타(7.0%)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인지채널로는 본 설문을 통해서, 수협, 지인, 현수막 노출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표본의 인지채널 순과 동일하나 근해어업에서 매스미디어의 인지채널이 상대적으로 높게(37.8%)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31.0%)가,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40·50대(각 34.8%, 34.2%)가 상대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CPTPP 협정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

【CPTPP 인지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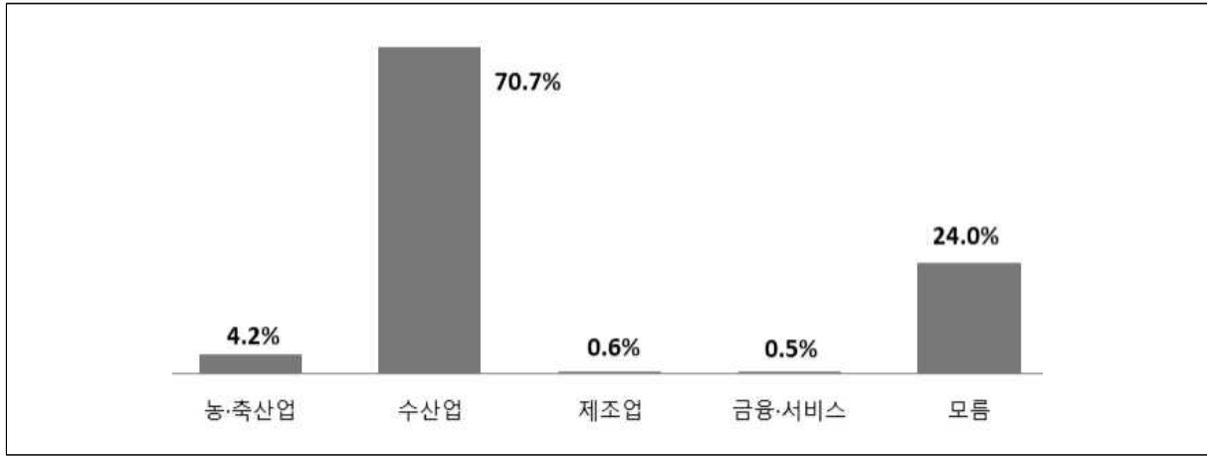


교차분석		응답수	매스미디어	정부 설명회	기관·단체설명회	기타	모름
■ 전체 ■		4,985	30.6	3.8	14.7	7.0	43.8
종사 어업	근해	611	37.8	3.3	16.5	7.5	34.9
	연안	2,485	31.3	3.4	16.2	7.8	41.4
	양식	956	27.1	4.5	13.9	6.0	48.5
	기타	821	25.3	4.4	11.2	5.7	53.3
성별	남자	3,733	31.0	3.5	15.6	6.9	43.0
	여자	981	28.3	4.3	11.5	7.5	48.3
연령	40대이하	1,589	34.8	3.2	13.3	6.1	42.5
	50대	1,476	34.2	4.0	14.6	6.7	40.4
	60대	1,447	25.3	4.3	15.0	7.9	47.5
	70대이상	453	21.9	3.3	19.0	8.6	47.2
지역	수도권	343	21.6	2.9	9.0	6.4	60.1
	충청권	562	36.7	2.3	18.3	8.4	34.3
	경상권	1,660	34.1	4.5	16.7	4.3	40.3
	전라권	1,477	24.2	4.3	13.1	6.5	51.9
	강원/제주	943	34.3	2.8	13.7	12.1	37.2

▶ CPTPP 피해분야 인식도 : CPTPP 체결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70.7%가 수산업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그 정도(수산업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응답)는 근해어업(7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양식어업은 상대적으로 낮음(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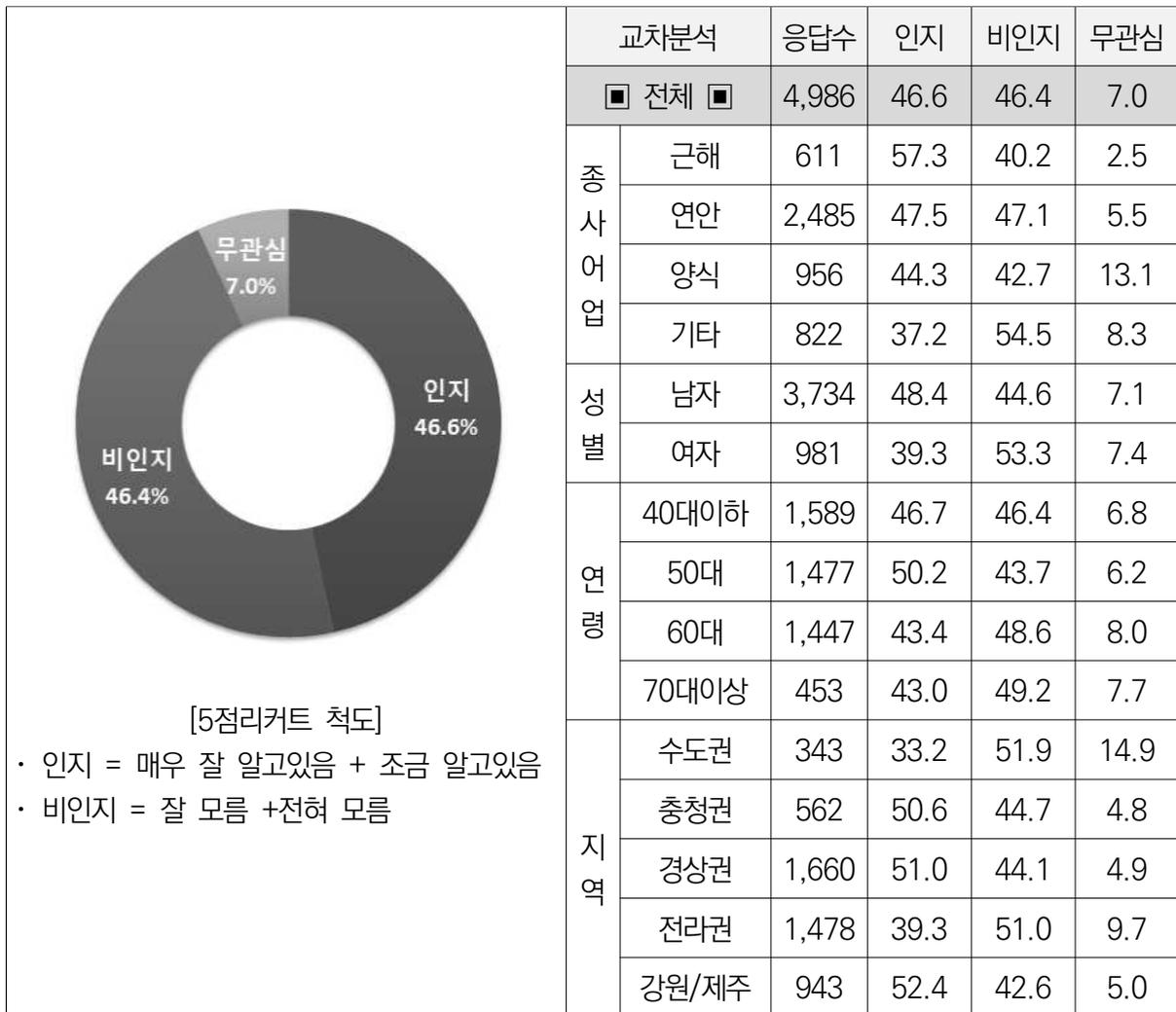
【CPTPP 피해분야 인식도】



교차분석		응답수	농·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금융·서비스	모름
■ 전체 ■		4,986	4.2	70.7	0.6	0.5	24.0
종사 어업	근해	611	2.9	78.1	0.5	0.3	18.2
	연안	2,485	4.9	72.1	0.6	0.5	21.9
	양식	956	3.2	68.3	0.5	0.3	27.6
	기타	822	4.4	63.0	0.4	1.0	31.1
성별	남자	3,734	4.3	70.9	0.5	0.5	23.8
	여자	981	3.9	69.2	0.9	0.7	25.3
연령	40대이하	1,589	4.5	68.9	0.7	0.6	25.3
	50대	1,477	3.9	73.2	0.5	0.5	22.0
	60대	1,447	4.4	69.6	0.6	0.3	25.1
	70대이상	453	4.0	72.6	0.2	1.1	22.1
지역	수도권	343	4.1	52.2	0.3	1.2	42.3
	충청권	562	3.0	79.9	0.2	1.1	15.8
	경상권	1,660	3.6	75.5	0.7	0.4	19.9
	전라권	1,478	5.1	65.4	0.6	0.6	28.3
	강원/제주	943	4.8	72.0	0.5	0.1	22.6

- ▶ CPTPP 수산업 영향 인지정도 :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46.4%가 CPTPP 체결로 인한 수산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 반면 알고 있는 어업인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46.6% 비율
 - 업종 중, CPTPP 체결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을 알지 못하는 정도는 연안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안어업 47.1%» 양식어업 42.7%» 근해어업 40.2% 순
 - 성별로는 여자(53.3%)가, 연령에서는 70대 이상 응답자가 CPTPP 체결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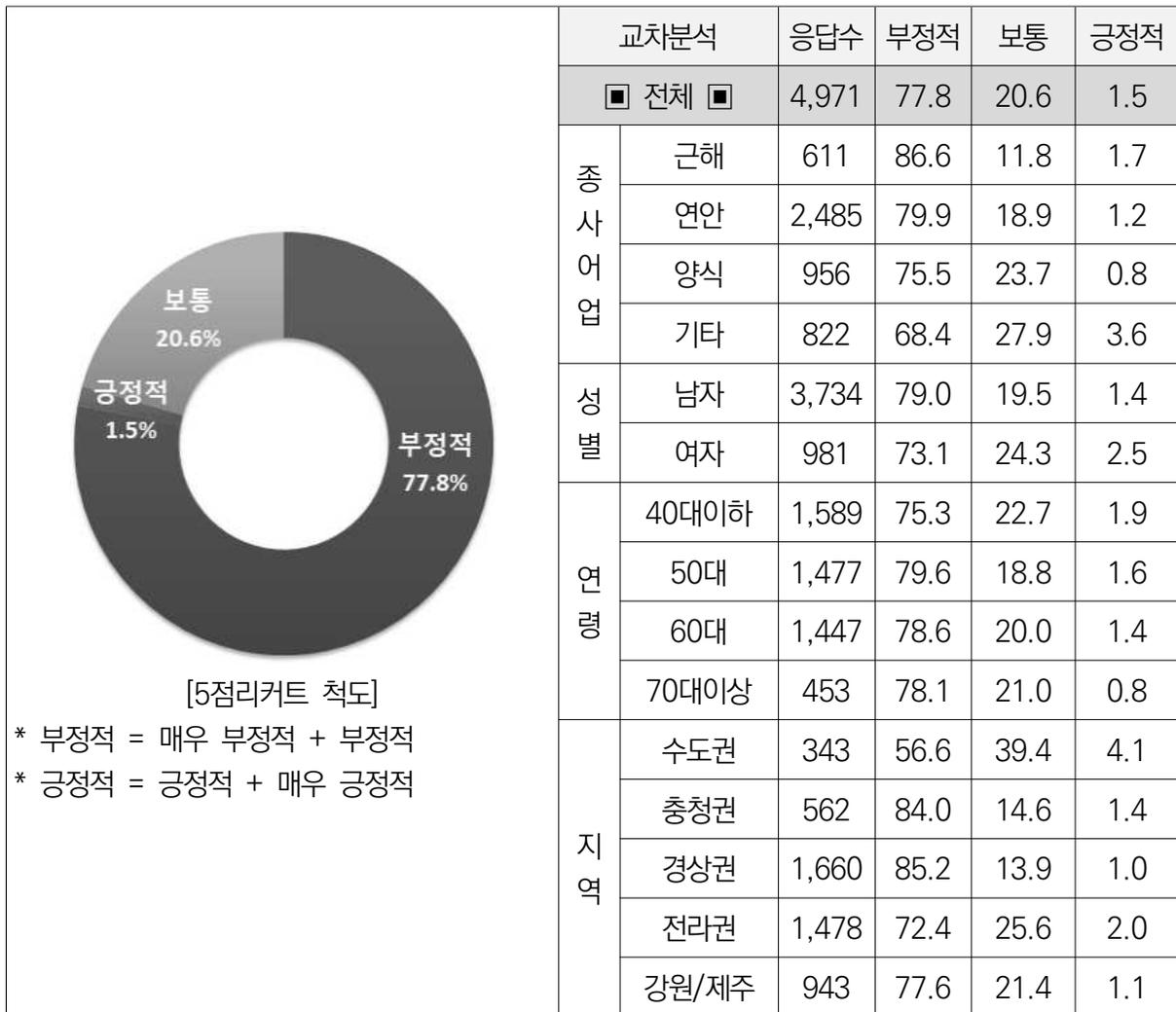
【CPTPP 수산업 영향 인지정도】



▶ CPTPP 수산업 영향 인식도 :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77.8%가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
- 그 정도는 근해어업에서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양식어업에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75.5%)

【CPTPP 수산업 영향 인식도】



3. CPTPP 대응 관련 사항

▶ CPTPP 가입 수용도 :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한 찬/반 응답

- 전체 응답자의 74.0%가 정부의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반대하는 정도는 근해어업에서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양식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68.5% 비율
- 성별로는 남자(75.1%)가, 연령에서는 고령(60·70대이상, 각 77.0%, 78.6%)으로 갈수록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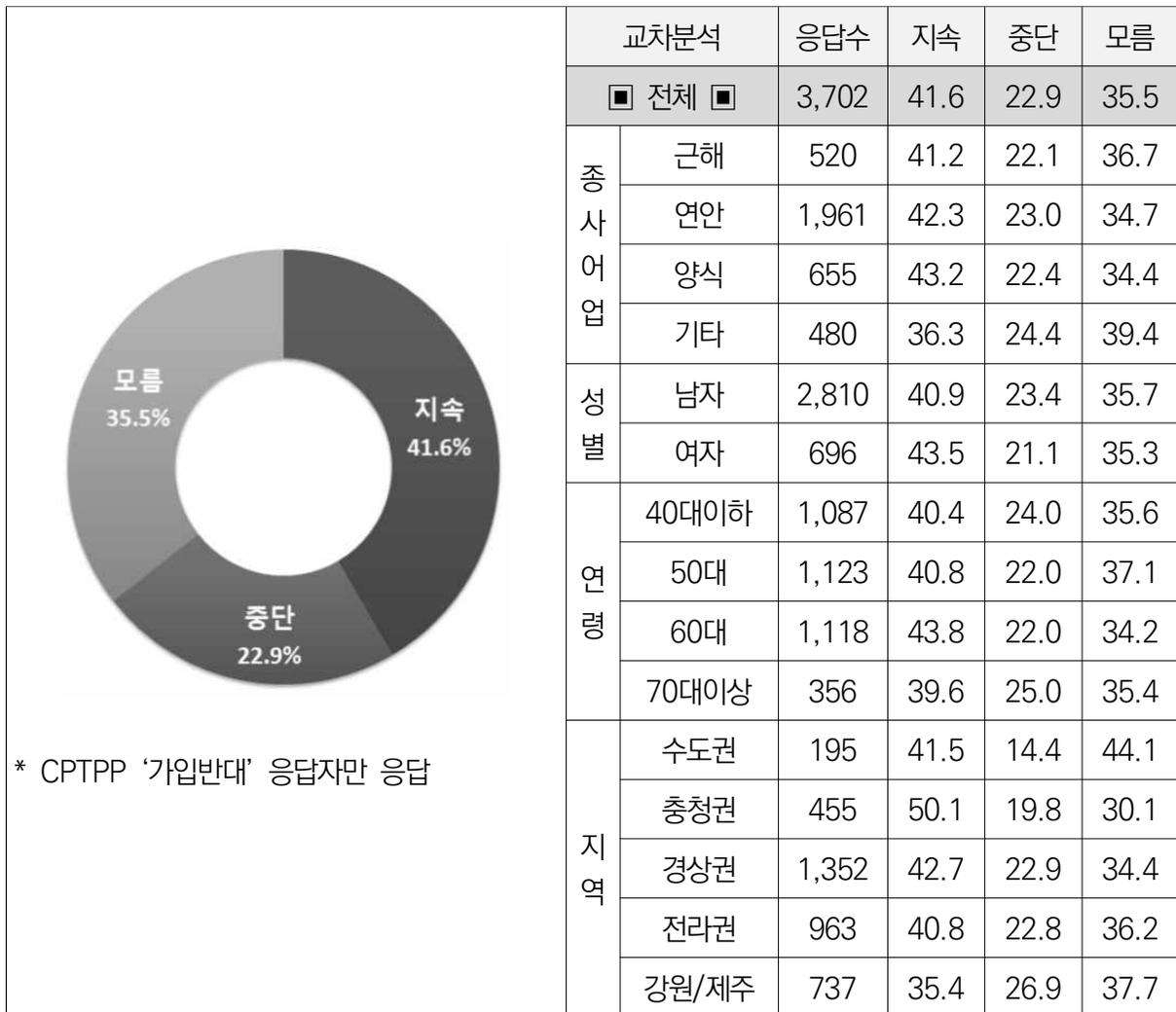
【CPTPP 가입 수용도】



▶ CPTPP 가입후 어업활동 지속의향 : CPTPP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 어업인의 22.9%는 어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 반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1.6%
 -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35.5%로 나타나, 어업활동 유지여부의 불확실성 표출
- 업종별로 어업활동 유지여부의 정도는 대체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강원 및 제주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26.9%)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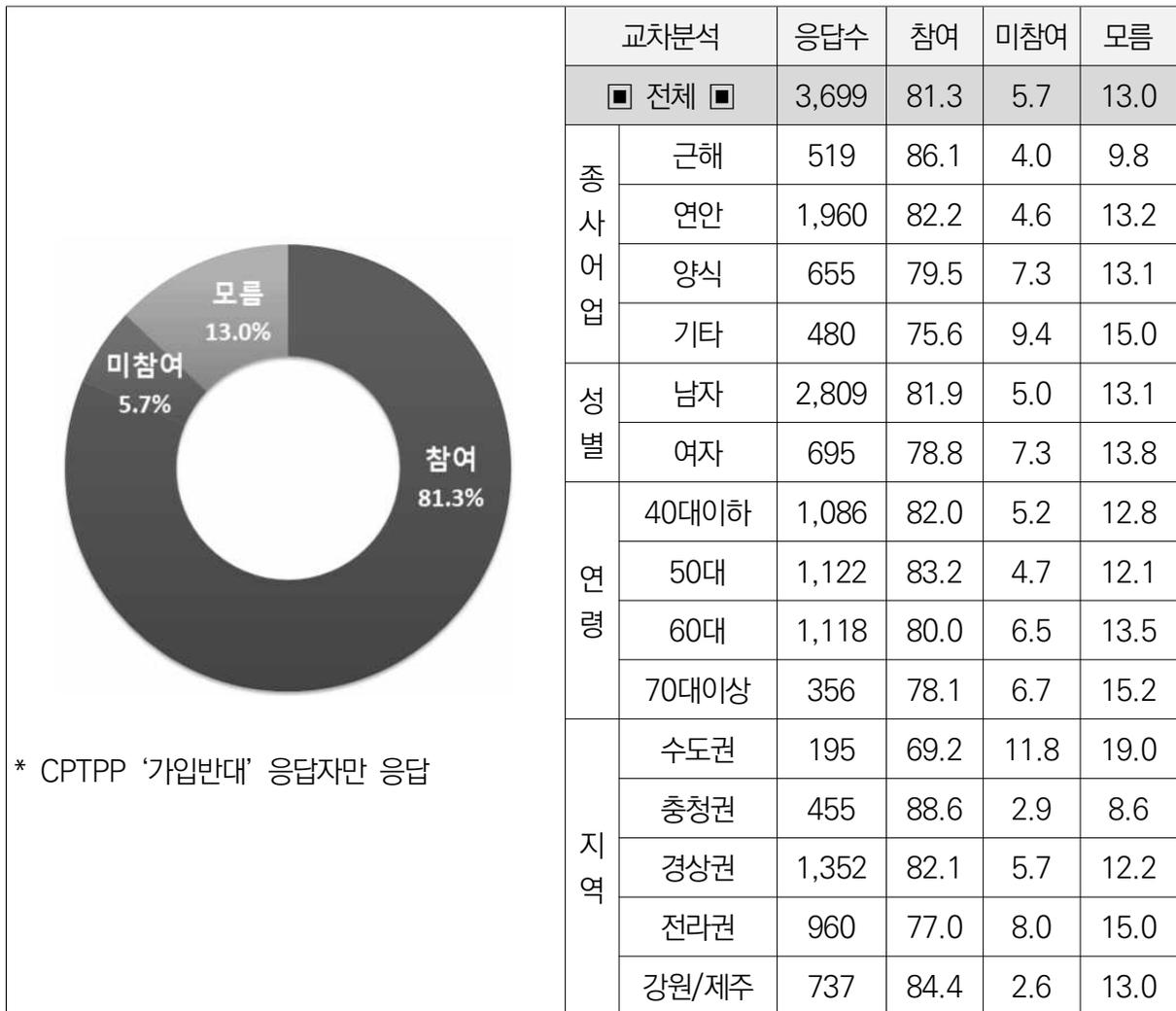
【CPTPP 가입후 어업활동 지속의향】



▶ CPTPP 가입 반대운동 참여의향 : CPTPP 가입 반대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 어업인의 81.3%가 CPTPP 가입 반대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
-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에서 가입 반대운동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86.1%), 반면 양식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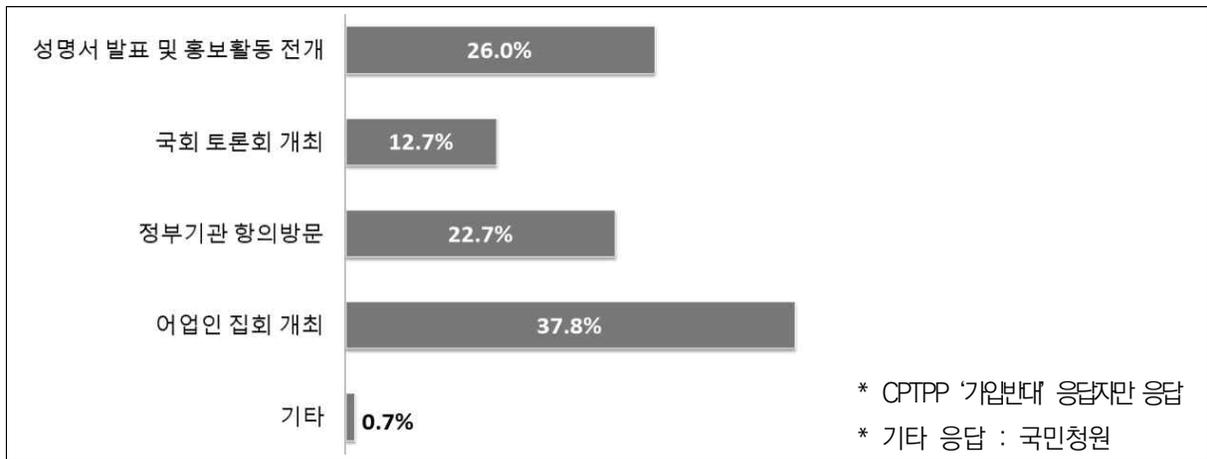
【CPTPP 가입 반대운동 참여의향】



▶ CPTPP 가입 반대운동 방법 선호도 : 가장 효과적인 CPTPP 가입 반대운동 방법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

- ‘어업인집회 개최’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설명서 발표 및 홍보 활동 (26.0%)’, ‘정부기관 항의방문(22.7%)’, ‘국회 토론회 개최(12.7%)’ 순 - 기타 방법으로는 국민청원
- 업종별로 보면, 연안어업에서 ‘어업인집회 개최’ 방법을 선호하는 비율이 42.0%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해어업에서는 ‘어업인집회 개최’와 ‘설명서 발표·언론홍보’ 선호 정도가 동일(28.4%)하게 높음

【CPTPP 가입반대운동 방법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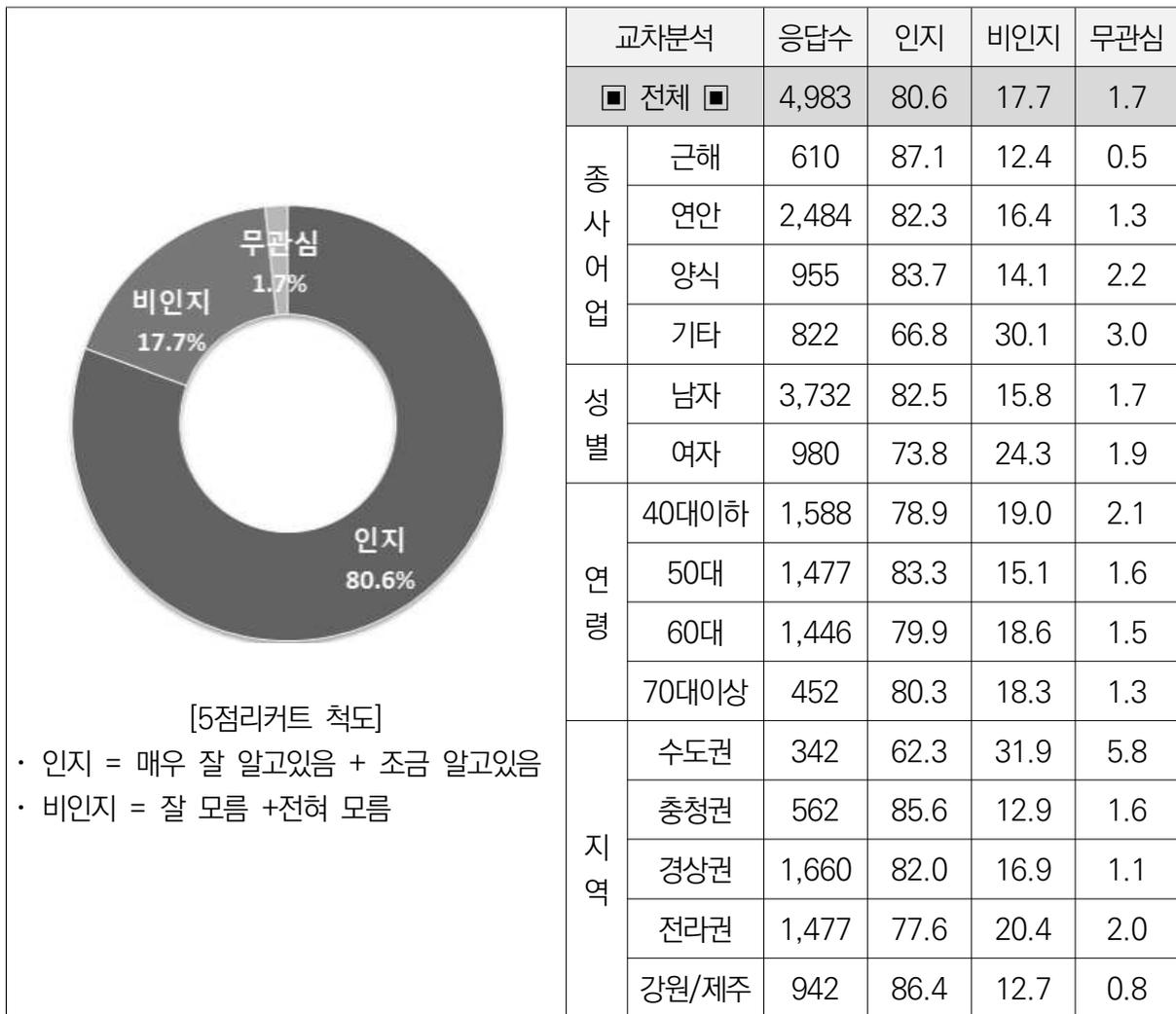


교차분석		응답수	성명서발표· 언론홍보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기관 항의방문	어업인집회 개최	기타
■ 전체 □		3,695	26.0	12.7	22.7	37.8	0.7
종사 어업	근해	517	28.4	14.5	28.2	28.4	0.2
	연안	1,959	24.5	10.2	22.4	42.0	0.9
	양식	655	28.1	17.6	20.3	33.6	0.5
	기타	478	26.4	13.6	21.3	37.9	0.8
성별	남자	2,806	25.1	12.8	22.4	38.9	0.8
	여자	694	28.0	12.0	23.1	36.5	0.6
연령	40대이하	1,085	26.6	13.7	25.1	33.9	0.6
	50대	1,121	28.0	12.3	20.9	38.1	0.7
	60대	1,116	24.0	12.5	23.6	39.2	0.7
	70대이상	355	26.0	12.6	22.7	37.9	0.7
지역	수도권	195	23.6	10.8	21.5	42.6	1.5
	충청권	455	29.9	15.2	19.6	34.7	0.7
	경상권	1,352	26.7	11.2	23.7	37.6	0.7
	전라권	959	25.7	16.4	21.0	36.2	0.8
	강원/제주	734	23.6	9.7	25.3	41.0	0.4

4. 수산보조금에 관한 사항

- ▶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정도 :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 어업인의 80.6%가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업종별 인지의 정도는 근해어업 87.1%» 양식어업 83.7%» 연안어업 82.3% 순

【정부지원 수산보조금 인지정도】



▶ 수산보조금 어업경영 영향 : 수산보조금이 어업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

- 전체 응답자의 90.9%가 정부의 수산보조금 지원이 어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업종별 도움의 정도는 근해어업 94.6% 》 양식어업 92.9% 》 연안어업 90.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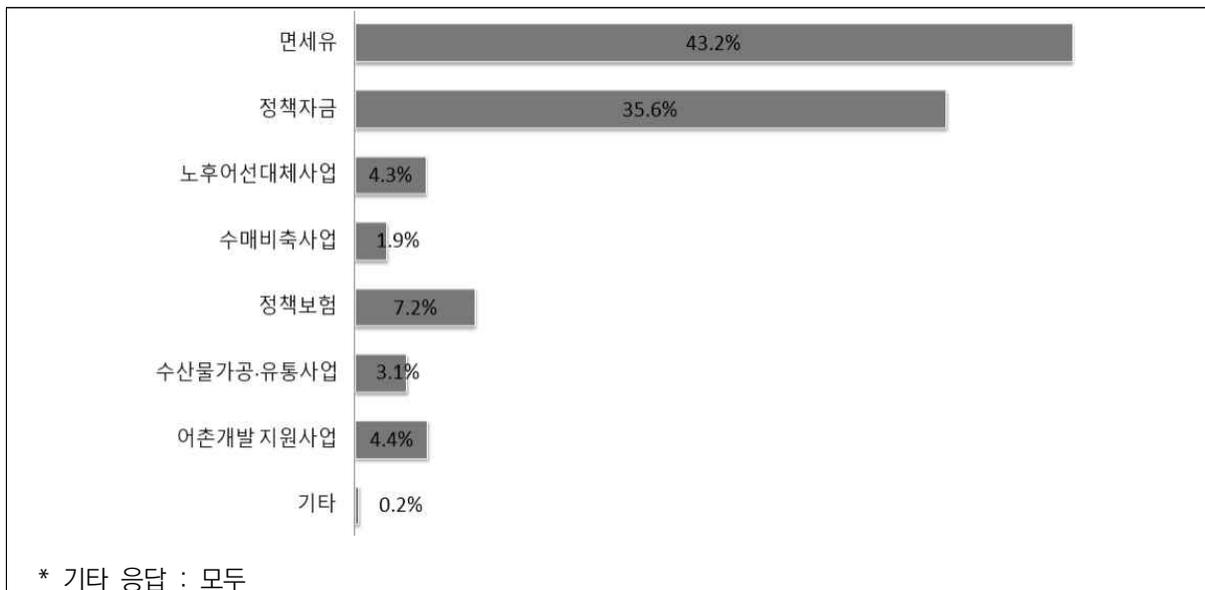
【수산보조금 어업경영 영향】



▶ 어업경영 수혜 수산보조금 유형 : 어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조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 어업용 면세유가 43.2%로 가장 높고,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35.6%, 수산정책보험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정도의 순은 업종별로 유사하나, 어업용 면세유는 연안어업(46.2%)에서,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업(39.2%), 그리고 정책보험은 근해어업(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어업경영 수혜 수산보조금 유형(중복응답)】



교차분석		응답수 (중복응답)	면세유	정책 자금	노후어선 대체	수매 비축	정책 보험	가공· 유통	어촌개발 지원	기타
■ 전체 ■		9,902	43.2	35.6	4.3	1.9	7.2	3.1	4.4	0.2
종사 어업	근해	1212	45.7	37.0	3.5	2.1	8.1	2.0	1.4	0.2
	연안	4,947	46.2	36.0	5.3	1.2	7.3	1.3	2.6	0.1
	양식	1,897	42.8	39.2	2.7	2.3	3.7	4.9	4.4	0.0
	기타	1,623	32.8	30.5	3.4	3.6	10.1	6.5	12.3	0.8
성별	남자	7,419	44.5	36.0	4.3	1.8	6.9	2.8	3.4	0.1
	여자	1,941	37.6	34.1	4.1	2.6	8.6	4.2	8.2	0.6
연령	40대이하	3,158	42.4	36.5	4.1	2.1	6.9	3.9	4.0	0.2
	50대	2,944	44.0	36.7	3.6	1.6	7.2	2.8	3.8	0.2
	60대	2,871	42.9	34.5	4.7	2.1	7.7	2.8	4.9	0.3
	70대이상	889	44.7	33.1	5.6	1.9	6.5	2.2	5.7	0.2
지역	수도권	666	34.1	26.4	4.5	3.2	10.7	9.6	10.7	0.9
	충청권	1,122	43.4	36.3	2.2	1.0	7.8	2.8	6.5	0.0
	경상권	3,303	45.2	39.0	3.8	1.0	6.7	1.3	2.8	0.1
	전라권	2,932	43.2	36.6	3.4	2.3	6.2	4.2	4.0	0.1
	강원/제주	1,518	53.0	14.8	9.2	3.7	10.1	3.3	5.1	0.7

▶ 어업용 면세유 유지 필요성 : 면세유 제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응답

- 전체 응답 어업인의 94.2%가 면세유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
- 그 정도는 근해어업 97.7% » 연안어업 96.0% » 양식어업 93.6% 순

【어업용 면세유 유지 필요성】



▶ 수산정책자금 유지 필요성 : 수산정책자금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응답

- 전체 응답 어업인 94.6%가 수산정책금융 이차보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
- 그 정도는 근해어업 96.3% 》 연안어업 96.0% 》 양식어업 94.8% 순

【수산정책자금 유지 필요성】



Ⅲ 시사점

- ▶ CPTPP에 대한 對어업인 적극 홍보 필요, 연안어업 어업인 더욱 할애
 - 어업인의 과반수 이상이 CPTPP 협정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입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CPTPP 협정 비인지정도 : 53.0%, CPTPP 정부 가입추진 비인지정도 : 55.4%
 - 특히 비인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연안어업에서 높게 나타나, 연안어업 어업인에 대한 홍보 노력 할애가 필요

- ▶ ‘어업인 점점’ 채널을 활용한 對어업인 홍보효과 극대화 필요
 - CPTPP 인지채널 중 상대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가장 높게(30.6%)난 반면, 기관·단체설명회(14.7%) 및 지역수협차원에서의 홍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어업인 점점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단체설명회의 지역 거점별 수시개최 및 지역수협 주체의 어업인 설명회, 현수막 노출 등의 시각적 홍보 필요

- ▶ 對어업인 홍보시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강조, 경각심 일깨울 필요
 - 어업인들은 CPTPP 체결이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77.8%)으로는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 및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6.4%)
 - 따라서 수산업 피해액 등의 정량적 지표, 어업별·업종별 피해의 정도 등을 어업인들에게 노출, CPTPP 가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반대운동 참여를 유인

- ▶ 전국적·대규모 ‘어업인집회’ 개최, 국민 여론형성을 위한 수산업 피해의 심각성 노출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 CPTPP 가입 반대운동 참여의사는 81.3%
 - CPTPP 가입 반대운동 선호방법 중 어업인집회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수산보조금은 어업경영에 직결, 설문 결과를 정부 건의안에 반영하여 정부의 호혜적인 어업인 대책지원 마련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및 수산정책자금의 유지 필요성의 정도는 각 94.6%, 91.2%로 절대적으로 높음
 - 어업인의 90.9%가 수산보조금이 어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응답이 높은 유형 : 면세유(43.2%) » 수산정책자금(35.6%) » 수산정책보험(7.2%)
 - 수산보조금은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본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 건의안에 반영, 보조금 금지시 어업인들이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강조

- ▶ CPTPP 가입 시 어업활동 유지 불가능, 어촌소멸 현실화 우려를 대비한 다각적인 어업인 경영유지 지원책 마련 절실
 - CPTPP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조사 어업인의 23%는 어업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응답. 특히 조사 어업인의 36%는 어업활동 유지 여부의 불확실성(모르겠다 응답) 표출
 -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 고령화, 낮은 소득 및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어가인구 감소와 함께 소멸위기에 처해있는바,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활동 중단 시 어촌소멸 우려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2045년 전국 연안어촌지역 및 국토외곽지역의 81.2% 소멸 예측(KMI, '21)
 - 이에, 다각적인 어업인 경영유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CPTPP 가입 시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정책 변화

박준모 연구위원
(jmp1970@suhyup.co.kr)

목 차

요 약	64
I.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목표	67
II. 윤석열 정부 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70
III.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비교	76
IV. 시사점	86

요 약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목표

-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 국정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주요 내용 :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지방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윤석열 정부 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센터 통합('25년)
 - (섬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해양 개발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촌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어업인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
 - (해양신산업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타 부처 정책 중 수산·어촌 관련 정책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통상자원부)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통상자원부)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비교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의 주요 내용
 - [전략 1]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 :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 [전략 2]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 : 함께 잘 사는 어촌,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 상생 연안·항만 조성
 - [전략 3]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전략 4]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 : 해양수산 新산업 창출, 기존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 선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 조성
 - [전략 5]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 : 탈탄소·친환경 항만 실현, 해양공간 활용·관리 최적화, 생태계 다양성 보존
 - [전략 6]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 : 국제사회 상생 견인, 해양영토 수호, 동북아 번영 기여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21~'25)의 주요 내용
 - [전략 1] 생산기반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 :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 [전략 2] 수산식품: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 : 지속가능 수산물 먹거리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 [전략 3] 어촌·어항: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 : 활력 있는 일터 마련,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전략 4] 국제위상: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 :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 [전략 5] 미래산업 :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 :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해양수산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수산분야 정책 비교
 - 대부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계승
 -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통합 및 재구성, 기존 정책의 세분화
 - 어촌 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개선에 중점
 - ⇒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등 '섬 주민 이동권 증진' 강조
 - ⇒ '23년부터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I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목표

-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 당선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 예상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에 승리
 -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됨으로 인해 해양수산 부문의 정부 정책 변화 예상
 -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통합의 정치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
 -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고,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추진 전망

1.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
-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의 주요 내용
 - 일 잘하는 정부 :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 역동적 혁신성장 :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함
 - 생산적 맞춤형 복지 :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함
 -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것
 - 글로벌 중추국가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함

2.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음
- 국익과 실용
 -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
- 공정과 상식
 -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 미래 + 지방시대 등 국정목표 설정
-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
 - 코로나 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 약속
-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
 -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

-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 약속
-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
 -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
 -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 약속
-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 기술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준비
 - 기후환경 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 약속
- **(외교·안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과학기술 강군(強軍)으로 만드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 마련
 -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런 조국을 약속
- **(지방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목표

II 윤석열 정부 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 과제 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2) 주요 내용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 **(섬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 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 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2.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1) 과제 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2) 주요 내용

- **(어촌활력 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특화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 확대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 관리형 제도확립, 스마트양식단지(6개소¹⁾)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수산식품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 **(어업인 복지 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해양바이오뱅크²⁾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1) 부산광역시, 경남 고성군, 전남 신안군,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시 등 5개소에 지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 6번째 스마트양식단지 지정 예정

2) 해양바이오뱅크는 항균, 항산화 등 유용한 해양생명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 등에게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 2018년 부터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정현황】

항목별	1차(부산광역시)	2차(경남 고성군)
지정	지정 ('19.1.24)	지정 ('19.8.23)
사업부지 위치	기장군 동백리 256 * 부경대 연구단지(국유부지)	하이먼 덕호리 810-5 *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회처리장
사업면적	총 67,320㎡(2.0만평) * T.B.(7,800㎡/ 2.4천평), 배후(59,520㎡/ 18천평)	총 100,000㎡(3.0만평) * T.B. (16,000㎡/ 4.8천평), 배후 (84,000㎡/ 25천평)
조감도		
항목별	3차(전남 신안군)	4차(강원 강릉·양양)
지정	지정 ('20.1.30)	지정 ('21.3.2)
사업부지 위치	지도읍 자동리 1988-2 외	강릉 연곡면 일원(테스트베드), 양양 현북면(배후부지1), 양양 손양면(배후부지 2)
사업면적	총 67,408㎡(2만평) * T.B.(37,458㎡/ 11.3천평), 배후(29,950㎡/ 9.1천평)	총 218,467㎡(6.6만평) * T.B. (36,073㎡/ 10.9천평), 배후 (182,394㎡/ 55.3천평)
조감도		
항목별	5차(경북 포항시)	
지정	지정 ('21.4.28)	
사업부지 위치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일원	
사업면적	총 224,140㎡(6.8만평) * T.B. (28,570㎡/ 8.6천평), 배후 (195,570㎡/ 59.3천평)	
조감도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3.3.

3. 타 부처 정책 중 수산·어촌 관련 정책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등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 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안전 검증 확대
-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2)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 (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현장 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

3)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 전략) IPEF³⁾ 참여 긍정 검토, CPTPP⁴⁾ 가입 추진,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RCEP⁵⁾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국가로서 인도·태평양지역의 新통상 질서 주도

- **(무역구조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지원 강화
 -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 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4) 기획재정부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 마련·시행
 -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5) 환경부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예산)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 (녹색산업·기술 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⁶⁾, 환경 IoT, 바이오가스⁷⁾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6) 국방부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6) 기후테크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거나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연구하는 기술을 의미

7)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어지는 수소, 메탄과 가스들을 의미

Ⅲ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수산분야 국정과제 비교

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⁸⁾

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개요 및 목표

- 향후 10년의 해양수산 정책 기본방향으로 ①생명·안전 중시, ②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③친환경·탈탄소 정책 강화 제시
- 2030년까지 ①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원, ②어가 평균소득 7천만원, ③항만 물동량 20억톤, ④지배선대 11,250만DWT, ⑤해양쓰레기 50% 감축 실현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②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③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함

* 3대 목표 - 6대 추진전략 - 18대 정책목표 - 50대 정책과제 - 146개 세부과제 / 해양수산부 단독 과제 108개, 타 부처(15개) 협조과제 38개로 세분화

2)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전략 1]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 **(안심하고 일하며 누리는 해양)** 빅데이터·IoT를 활용한 종사자 사고방지 시스템 구축, 수산업 작업 가이드라인 의무화, 新해양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 해양 교통안전망 고도화 및 항만 방역체계 강화 추진
-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친환경 양식을 장려하여 수산물 청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바닥경매 근절 등 투명한 품질관리·유통체계 구축
-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 재해예측능력 및 사전 예방적 방재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

8)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계획이다

▶ [전략 2]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 **(함께 잘 사는 어촌)** 공익형 직불제 시행*, 어촌산업 다각화, 어촌·어항 재생, 외국인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시행(‘21.3)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기능 강화
-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섬의 접근성·연결성 및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섬 관광 활성화 지원
 - * 연안해운과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노후병원선 대체건조비 지원 및 원격 협진 등
- **(지역 상생 연안·항만 조성)** 노후·유휴 항만·어항과 접근성이 낮은 연안을 지역과 상생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열린 해양공간으로 재창조

▶ [전략 3]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입출항 등 항만지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항만* 및 해상 수출입물류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 * 항만 설비 자동화·지능화 및 선박·육상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설비운영이 최적화된 항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육상 기반(LTE-M, 5G) 해양디지털 연안 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콜드체인 전용 항만배후 물류단지 개발
 - * ① 충돌·좌초 예측경보, ② 최적항로 안내, ③ 전자해도 최신화, ④ 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스마트 양식기술 및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공장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업 전주기 디지털화
 - *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로 구성
 - 스마트 저온유통 관리체계 구축 등 수산물 비대면·온라인거래 활성화 지원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개방,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유통체계 마련 등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
 - * 데이터의 활용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구조(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

▶ [전략 4]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 **(해양수산 新산업 창출)** 해양수산 新산업* 육성, LNG 병커링·선박수리조선·수산 기자재 및 낚시 산업 지원 강화로 해양수산업 시장 확대
 - * ① 해양바이오업, ② 해양레저관광, ③ 첨단 해양장비, ④ 해양에너지 개발

- **(기존산업의 혁신 성장 촉진)** 선박대형화·국가 기간산업에 연계한 항만개발, 국적선사 경영안정* 및 선화주 상생협력 지원 등
 - * ①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② 선박 소유와 운영의 분리, ③ 화주의 선박금융 참여 유인 - 해운항만 물류기업 해외진출 및 규모화(선사 얼라이언스 구성, M&A 등) 지원,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지원, 빅데이터 기반 해양수산업 분석·전망·예측*
 - * ① 해양수산 통계 강화, ② 해양수산 위성계정 신설, ③ 산업진단 시스템 구축, ④ 중장기 전망모형 개발
- **(순순환 구조의 산업생태계 조성)** 창업 성장사다리 마련과 수요자 중심 R&D 지원,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추진

■ [전략 5]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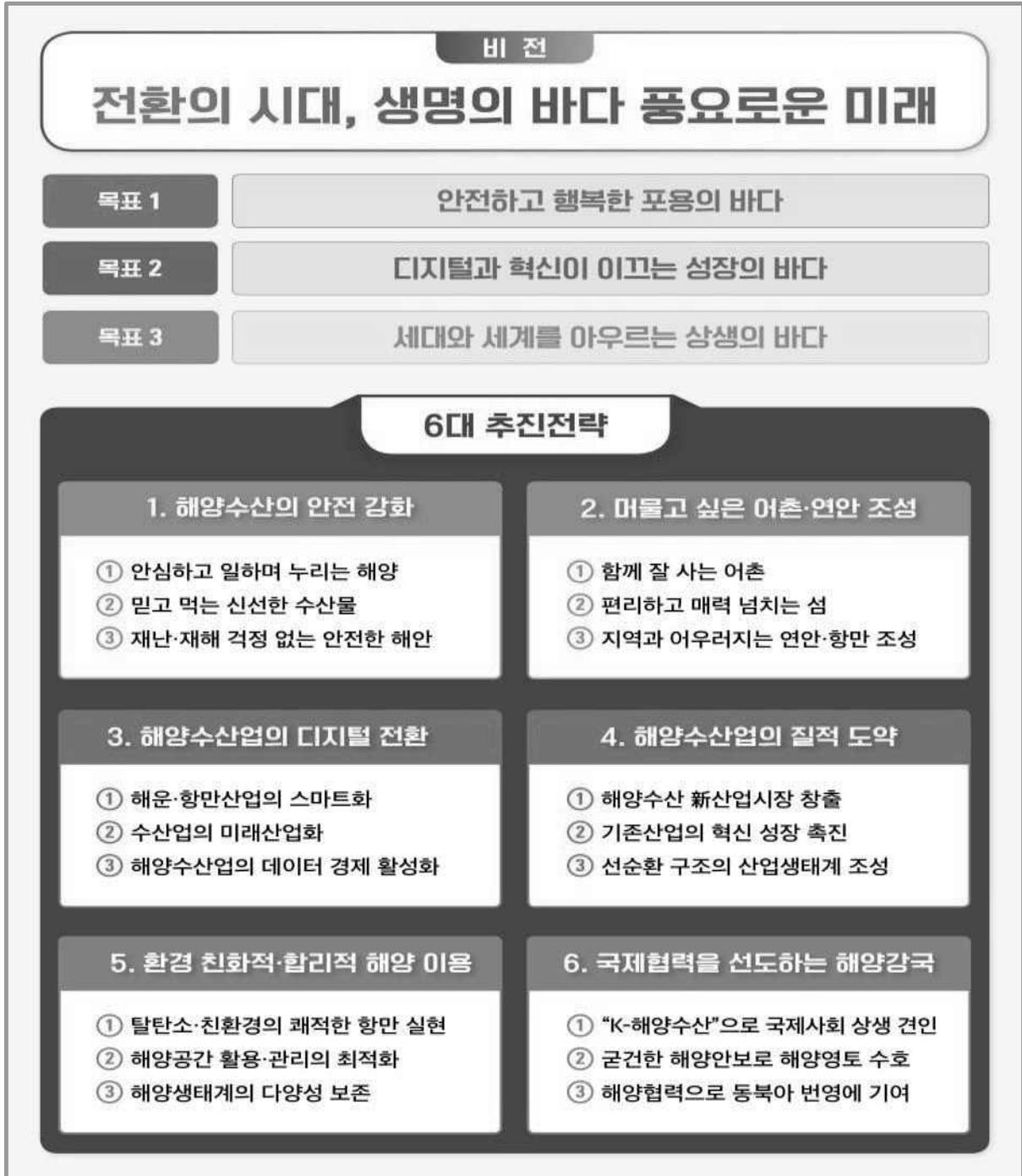
- **(탈탄소·친환경 항만 실현)** 친환경선박 시장 생태계* 조성, AMP(육상전원 공급시설)·배기가스 포집장비 설치 등 항만·선박 대기질 개선
 - * (상용화 기반) 기술개발-기준마련-선박실증-시험설비 고도화 ↔ (보급촉진) 선박건조-선박운영
- **(해양공간 활용·관리 최적화)** 해양공간계획 기술 고도화*, 공유수면 공공성 강화,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로 쓰레기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
 - * ① 해양의 인간활동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모델 개발, ② 전 해역 생태계서비스 가치 지도화, ③ 해양공간 최적 활용과 가치 극대화 기술 개발
- **(생태계 다양성 보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해양 생태계 개선**, 해양-수산 보호구역 통합관리 및 주민참여 해양환경관리체계 확립
 - * ① 총허용어획량제(TAC) 확대, ② 포획금지체장 상향, ③ 전자어획보고 및 불법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불법어업 단속 강화
 - **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 등

■ [전략 6]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 **(국제사회 상생 견인)** 해사분야 핵심의제(친환경·신기술 국제표준 제정) 주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친환경 연안선박 개발 등 개도국이 요구하는 ODA 발굴
- **(해양영토 수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관리 강화*, 독도 시설물 현대화 등으로 해양영토 안전 확보, 영토 분쟁에 대응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 * 서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예정(「제4차 항만기본계획」)

- (동북아 번영 기여) 한중·한일 간 수산자원관리 협의체, 동북아 해역 이동성 동물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 남북 해양수산 협력으로 동북아 협력 강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체계도】



2.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21~'25)⁹⁾

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개요 및 목표

-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중심 가치 실현,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및 글로벌 수산업 위상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 2025년까지 ①수산물 자급률 79%,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원, ④수산물 수출 30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원 달성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은 ①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③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⑤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으로 구성

* 5대 목표 - 10대 전략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2)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전략 1] 생산기반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 (연근해어업) TAC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하고, 전략 감척 등 구조개선 사업 추진, 불법어업 단속 강화로 자원 회복
 - (양식산업) 종합적 예방양식 체계 마련 및 양식표준 보급·확산, 양식 관리제도 개선 등 자율형 책임양식 강화로 질적 성장 추진
 - (원양산업)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활용한 신조를 확대하고, 원양어업 근무환경 개선, 지역수산협력 강화 등 원양산업 조업여건 개선
- ②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연안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한 바다숲 조성, 자원회복 대상어종 산란·서식장 조성, 방류 종자 인증제 확대
 - (환경오염 대응) 청정어장 재생사업 및 어장 재배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저감, 연근해어업 어구관리 선진화 등 수산물 생산환경 정비
 - (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적응기술 개발, 양식장 유해생물 출현 및 확산 예측 고도화, 재해취약성 평가 및 재해지도 작성 등 역량강화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 [전략 2] 수산식품 :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③ 지속가능 수산물 먹거리시스템 구축

- **(자급률·수급)** 대중성 소비어종 중심의 자급률 관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화
- **(식품안전관리)** 신규 위해요인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원산지 및 이력관리 강화, 수산물 신선물류 체계 구축
- **(상생협력)**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마련, 직거래 사업 도입·확대, 공공부문 급식 등 공급 확대

④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유통인프라)** 위판장 클린스타트 추진,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현대화, 활선어 종합 유통시스템 마련 등 新 유통경로 구축
-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신선유통체계 구축, 수산물의 등급·포장 등 표준규격 개선, 수산물 가공포장 지원
-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가정간편식(HMR) 등 맞춤형 식품 개발, 지역특화 수산식품 가공 산업화

▶ [전략 3] 어촌·어항 :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⑤ (일터) 활력 있는 일터 마련

- **(어촌산업)** 어촌 융복합 산업육성, 수산부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공유 경제형 어업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마련 및 청년유입 확대
- **(안전한 환경)** 어선사고 예방·저감R&D, 어선원 근로·안전 감독업무 개편 및 외국인 종사자 고용 개선 등으로 종사자 근로안전 확보
- **(소득복지)** 어업인·어선원 복지서비스 개선 및 공익형 직불제 시행·확대, 여성 어업인 복지 강화로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⑥ (삶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어촌사회 유지)** 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등 공동체 유지 강화
- **(지역주도 어촌·어항재생)** 어촌뉴딜사업 내실화, 유희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섬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성과 창출
- **(어항시설 확충·개발)** 특화어항 유형 재편 및 확대 개발, 청정어항 사업 추진 및 확대, 어촌어항 환경정비 등 이용자 중심 어항 개발

▶ [전략 4] 국제위상 :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⑦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출지원 강화)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해외시장 확대 및 인지도 향상, 수출 전문기관 설립 및 마케팅 등 지원 강화
- (수출 경쟁력 강화) WTO, FTA 및 수산식품 국제위생조치 등 국제규범 선제 대응체계 마련, 수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 대응
- (해외진출 확대) 해외어장 개척 등 지원, 수산업 해외 진출 지원, 국제협상 전문가·옵서버 등 수산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⑧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 (국제규범 이행) 국제기준에 맞는 IUU어업 관리,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등 민간양식 규범대응, 수산부문 해양포유류 보호 양자협상 대응
- (국제사회 공조 확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관리 협력 강화, 다자 원조사업 확대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생산부문 에너지 절감 지원,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 추진

▶ [전략 5] 미래산업 :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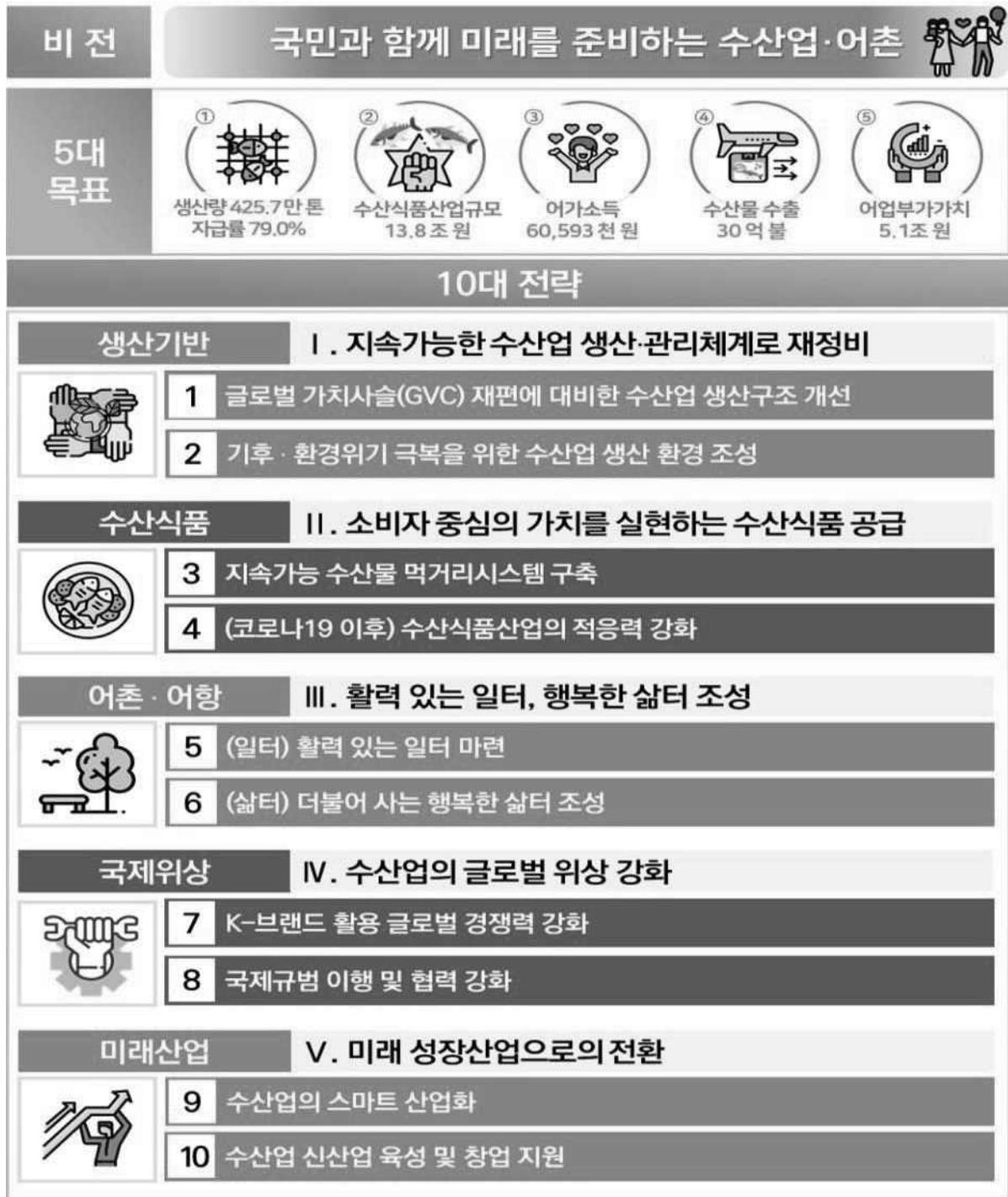
⑨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 (스마트 수산생산체계 구축) 스마트 어업관리모델 개발, ICT 기술 접목 양식 생산체계 구축, 안전관리형 어항 조성 등 스마트화 추진
- (비대면 수산사업화) 온라인 유통시스템 활성화,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 수요 예측기반 소비생태계 조성 등 비대면 수산업 육성 추진
- (수산 전주기 디지털화 기반 조성) 수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수산물 디지털 안전망 마련, 연관 신사업 법·규제 등 대응기반 조성

⑩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수산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종자관상어부산물 등 수산바이오경제 활성화, 어선건조 밸류체인 구축,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 (전방위적 수산기업 지원) 스타트업 성공모델 마련,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등 전방위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레저) 국내외 관광객의 어촌체험 유치, 레저선박 맞춤형 어항시설 확충, 낚시 활성화 등 수산레저산업 활성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 체계도】



3. 해양수산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수산분야 정책 비교

- 대부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계승
 -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수산분야 정책은 13개
 -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은 ①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②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두 축으로 추진
 - ⇒ 세부적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많음
 - 해양·수산부문의 정책 안정성 강조
- 기존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차이점
 -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통합 및 재구성
 -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②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③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②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이 수산업경쟁력 강화로 통합
 -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과 해양공간 활용·관리 최적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을 ① 공간 관리·연안 안전 강화와 ② 청정 해양환경 조성으로 재구성
 - 기존 정책의 세분화
 -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활력 있는 일터 마련,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함께 잘 사는 어촌이 ① 어업인 복지강화와 ② 농어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세분화
 -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 식품 공급,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믿고먹는 신선한 수산물이 ① 먹거리 안전권 강화와 ② 식생활 건강권 확대으로 세분화
 - 섬 정책의 강화
 - ⇒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등 '섬 주민 이동권 증진' 강조

【해수부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수산분야 정책 비교】

구 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해양환경	해양영토 수호	-	해양영토 수호·확장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해양공간 활용·관리 최적화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공간 관리·연안 안전 강화
	생태계 다양성 보존		청정 해양환경 조성
어 촌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섬 주민 이동권 증진
	함께 잘 사는 어촌	활력 있는 일터 마련	어촌 활력 제고 어업인 복지강화 농어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수산업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믿고먹는 신선한 수산물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먹거리 안전권 강화 식생활 건강권 확대
	-	-	군 급식 체계 개선
해양산업	해양수산 新산업 창출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해양 신산업 육성
	탈탄소·친환경 항만 실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국제협력	동북아 번영 기여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다자경제협력 심화

IV 시사점

기존 해양·수산부문 정책의 기초 유지

-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은 ①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②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두 축으로 추진
- ⇒ 세부적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의 내용과 유사

어촌 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개선에 중점

-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섬 주민 감소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 정지 예방 및 도서지역 삶의 질 제고
 - * 삶의 질 만족도 : 도시(6.1), 농촌(5.7), 어촌(4.9), 섬(3.8)¹⁰⁾
-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19년부터 추진해온 '어촌뉴딜 300사업'을 기반으로 관점의 전환
 - * 어가인구 : 25만1000명(2000년)에서 9만7000명(2020년)으로 61.4% 감소
 - * 총 491개 어촌 지역 중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284개의 어촌이 소멸 위기
 - '23년부터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
 - ⇒ 어촌의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서비스 지원 등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
 - * 기존의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조금 더 어촌 주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교육·문화·의료·일자리·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낙후된 어촌의 주거 및 일터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여 어가인구의 삶의 만족도 제고
 - ⇒ 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새로이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10) 박상우(2021), '어촌의 인구감소 실태와 정책대응 방향',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말하다 좌담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고문헌】

문헌자료

박상우(2021), 어촌의 인구감소 실태와 정책대응 방향,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말하다 좌담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해양수산부(2021),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_____ (2019),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01.11), 전환의 시대 2030, 디지털과 친환경이 주도하는 해양이 펼쳐진다 - 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 발표 -
_____ (2021.02.26),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 발표 -
_____ (2021.10.15), 해양바이오은행(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품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은행(뱅크), 전 분야에 걸쳐 국제인증(ISO) 획득 -
_____ (2021.12.10), 어촌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한다 -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_____ (2022.03.03), 2022년에도 양식산업의 디지털전환 계속된다.- 해수부,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자 공모 -

인터넷 사이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2-02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임준택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우동근
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	전화 (02) 2240-0422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현대아트콤 (02) 2285-3762~6
발행일	2022. 06